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여름캠프



일시

2023. 8. 16.(수) ~ 19.(토) (3박 4일)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경기도 파주 DMZ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전북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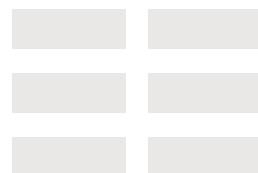
주최: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목 차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님 인사말	01
2.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소개	05
3. 여름캠프 프로그램 상세 일정	09
4. 강의안 및 강사소개	13
5. 여름캠프 답사지	79
6. 통일촌, 전략촌 참고자료	85
7. 조별 명단	141
8. 비상연락망	145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님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범수 교수입니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전북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통일평화 여름캠프’에 참여하신 국립대학교 재학생 여러분과 교수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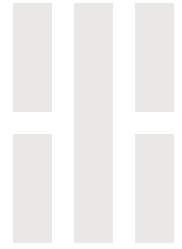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하여 서울대학교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구축한 학술 네트워크로 2019년 서울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제주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올해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가 추가로 참여하여 대부분의 거점 국립대학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2019년 출범 이후 평화아카데미, 동해평화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으며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한반도 SDG 지표 설정과 남북 협력의 과제’, ‘평화 실현을 위한 갈등 해결의 정치’, ‘평화와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통일평화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8월 16일부터 3박 4일간 서울대학교와 파주 일대에서 진행될 여름캠프에서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학생 여러분의 평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름캠프 준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네트워크 참여 교수님들과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원 여러분들과 각 대학 실무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3박 4일간 참가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김범수



2.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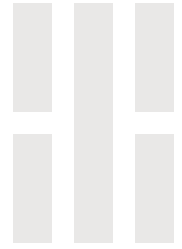
2019년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5개 지역거점국립대(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와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 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위의 5개 대학 이외에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까지 총 9개 대학이 함께한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세부사업으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취지]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던 국립대학들이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해 왔던 통일·평화 교육과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모색
-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이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세부사업]

1. “한반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 공동연구
 2. “평화실현을 위한 갈등 해결의 정치” 공동연구
 3. “평화와 민주주의” 공동연구
 4.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구성 및 운영
 5.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 



3. 여름캠프 프로그램 상세 일정



여름캠프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1일차 8월 16일(수)		
10:00~11:00	사당역 10시 -> 관악 220동 201호 이동, 등록	사당역 -> 220동 201호
11:00~12:00	여름캠프 입학식 개강식, 프로그램 설명, ice breaking, 조편성 공유	220동 201호
12:00~13:00	점심식사	사르샤
13:00~15:00	[강의1]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강사: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20동 201호
15:00~16:00	전쟁기념관으로 이동	
16:00~18:00	[답사1] 용산 전쟁기념관 관람	용산전쟁기념관
18:00~18:30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19:00~20:00	저녁식사	
20:00~21:00	조별 프로젝트 준비	
2일차 8월 17일(목)		
07:00~9:00	조식	호암교수회관
10:00~12:00	[강의2] 전쟁의 기억, 화해와 추모 강사: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20동 201호
12:00~13:00	점심식사	도시락
13:00~15:00	영화상영 <아일라> 한국, 튀르키예 합작, 123분.	220동 201호
15:00~15:30	휴식	
15:30~17:30	[강의3]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평화 강사: 권재범(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20동 201호
18:00~19:00	저녁식사	호암교수회관
19:00~21:00	조별 프로젝트 준비	호암교수회관

여름캠프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3일차 8월 18일(금)		
7:00~8:30	조식 및 체크아웃	호암교수회관
8:30~10:00	호암에서 파주로 이동	
10:00~12:00	[답사2] (도라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평화곤돌라 탑승, 갤러리그리브스 관람, 독개다리 및 벙커전시관 등	
12:00~13:00	점심식사	통일촌 마을회관
13:00~16:00	[답사3] 통일촌 마을 투어	
16:00~17:30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17:30~18:30	저녁식사	
18:30~19:30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파주 시에나 호텔
19:30-21:00	조별 프로젝트 준비	
4일차 8월 19일(토)		
7:30~8:30	조식	파주 시에나 호텔
9:00~11:00	서울대 시흥캠퍼스 통일평화연구원으로 이동	이동
11:00~12:00	조별 발표 / 수료식 및 기념촬영	교육협력동 609호
12:00~13:00	점심식사	1층 코문
13:00~14:30	해산. (사당역으로 이동)	



4. 강의안 및 강사소개



[강의1]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2020.12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016.5~2018.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2016.2~2016.5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교수

2013.12~2015.10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2008.9~2010.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부원장

2007.8~2008.6 미국 시카고대학교 방문 교수

2006.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5.1~2007.7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4.1~2005.12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1999.4~2001.3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소장

1996.9~1998.8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전쟁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2023.08.16

정근식

광복 78주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 세계대전 종전(광복)에서 한국전쟁 발발(내전+국제전)까지 5년
- 정전 이후 70년: 통일은 커녕 평화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또는 냉전평화), 두 세대가 지난 시점에서의 간접체험세대의 전쟁기억의 문제.
- 전쟁기억의 특징: 전쟁당시의 적대적 시각의 재생산 효과가 큼(국가주의적 기억 재생산)
- 한국전쟁기억의 특징: 남북한 뿐 아니라 미국(유엔)과 중국이 개입한 전쟁이어서 전쟁기억 또한 최소 4개국의 서로 다른 기억과 기념이 존재함. 또한 전투원과 민간인의 상이한 전쟁기억이 혼재함.
- 정전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열전에서 냉전으로, 탈냉전, 최근의 미중관계의 악화 등)가 전쟁기억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면서 종합적인 상을 확보해야 함.



전쟁기억은 무엇인가?

- 인구를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눔
- 적과 동지
- 승자와 패자(‘인정’투쟁과 ‘벌거벗은 생명’)
-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생존과 죽음/희생)
- 전쟁에 휩쓸린 자와 벗어난 자
- 전쟁경험과 전장경험
- 전쟁경험의 차이
 - *전투원과 비전투원(민간인)
 - *지역(전선)에 따른 차이
 - *국적(진영)에 따른 차이
 - *성별 차이
- 누구의 어떤 경험이 표준적 기억으로 정형화되는가?
- 교훈: 안보주의와 평화주의(적대감과 평화감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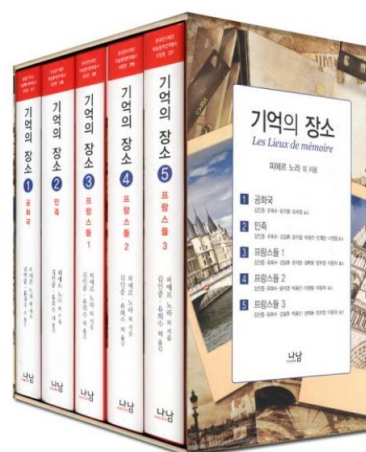
누구의 전쟁기억인가?

	직접 경험세대	간접 경험세대
개인적 기억	어디에 있었는가? 경험의 차이 침묵과 발화	부모의 영향
집합적 기억	어떤 집단에 속해 있었는가? 집단내의 상호작용에 따른 기억의 강화	집단별 분화
국가적 기억	개인적, 집합적 기억의 표준화 기억간 괴리(개인경험의 침묵)	교육 및 기억의 재생산장치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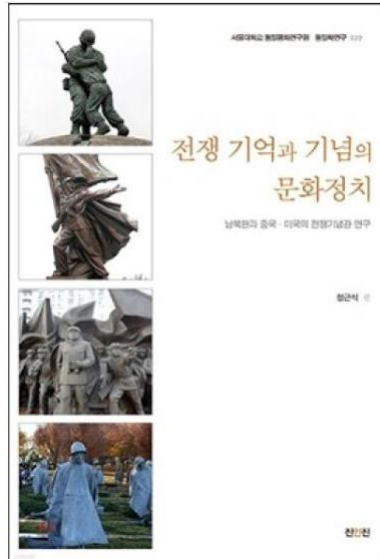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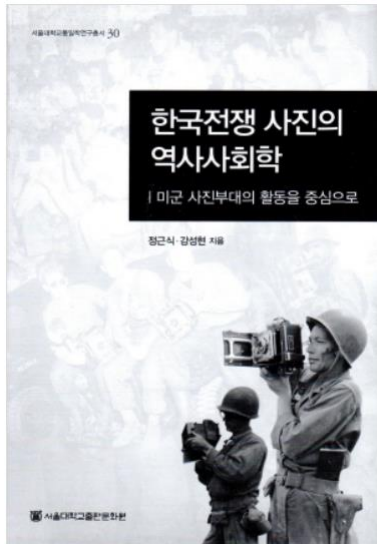
방법과 시각

- 전쟁기억과 국민형성론(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
-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론(중국내전과 한국전쟁의 연속과 혼합)
- 냉전: 전쟁과 평화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심리전이 지속되어 전쟁기억에 큰 영향을 미침
- 탈냉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평화로의 진전, 그러나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함
- 한중수교: 미중수교 이후 세계적 탈냉전의 흐름에서 적대관계의 청산
-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전쟁유산 문제는 우회함(유해발굴로 부터 시작)
- 미중관계의 최근 변화,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미치는 효과?
- 기억과 기념의 문제: 기념문화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또는 문화사회학적 접근
- <기억의 터>: 기념물과 기념관 중심접근/영화 및 소설 등 대중문화 중심접근
- 지피지기 백전백승론
- 지피지기 평화초석론

집합기억과 기억의 장소(알박스와 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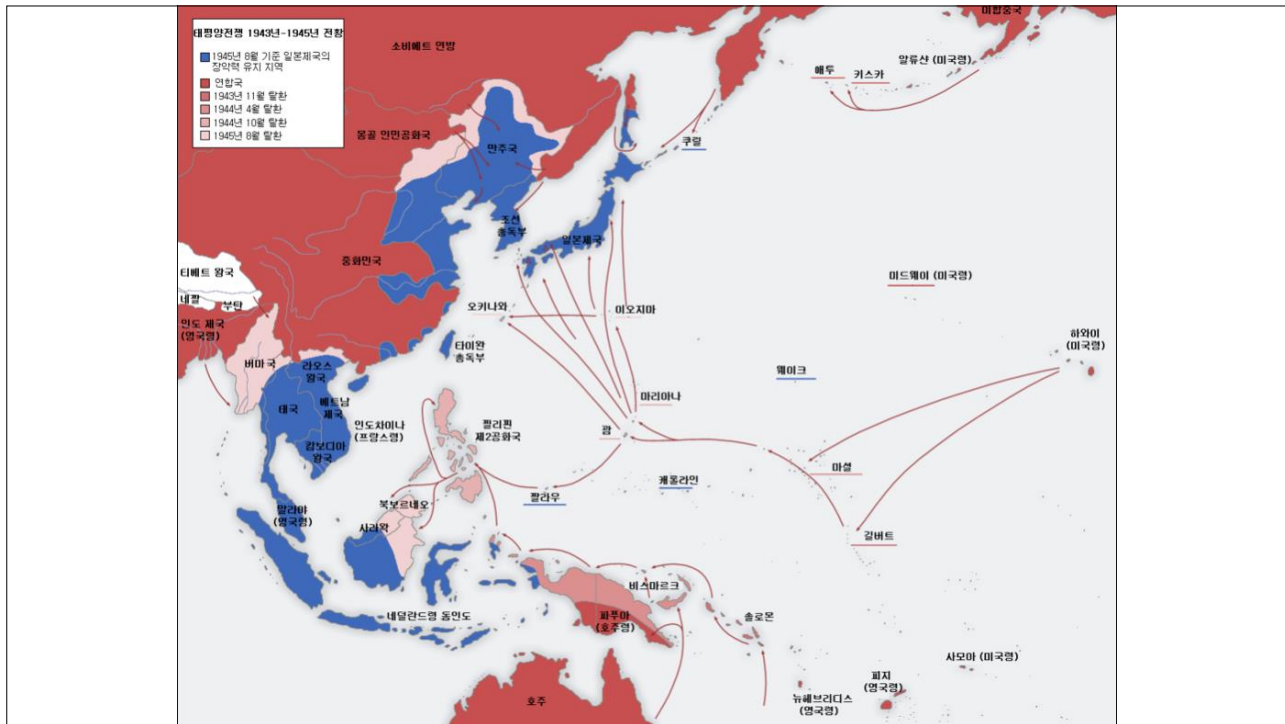
시각과 사각(물리적/구조적): 전쟁기억의 교차검증, 객관화



2차대전의 종전: 해방, 광복, 독립



- 남한의 해방/독립 기념비
- 북한의 해방탑
- 연변의 소련군기념비
- 만주의 소련군기념비
- 미군 기념비?
- 전장의 문제: 북한일부와 만주 지역



독립기념비(수원, 전주)



1945년 11월 15일 전주초등학교
'봉안전' 자리에 세워진
독립기념비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보문산) 유성초교 해방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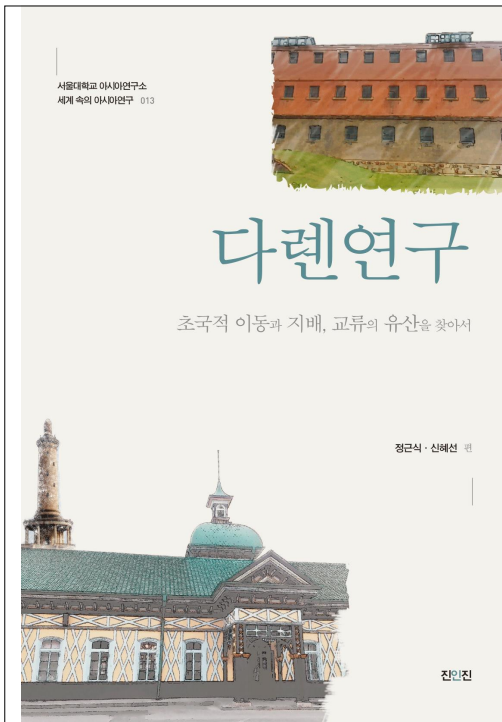
조선해방기념비

양양군 강현면 중북리

마을 어귀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었으나
2017년 중북골 마을 가운데인 물레방아 섬
터에 옮겨졌다.

38선 북방?





아시아리뷰 제5권 제1호(통권 9호), 2015: 195-230

냉전과 소련군기념비: 중국과 북한에서의 형성, 변화, 영향*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련군기념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기념비들의 대부분은 1945년부터 1957년까지 세워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시간과 기념의 시간의 질서를 검토하고, 이들의 의미의 변화를 밝히며, 나아가 소련군기념비가 중국과 북한의 기념문화에 미친 영향을 동아시아 냉전문화 연구의 맥락에서 질문하고 있다.

초기 소련군기념비는 '해방'과 '추모'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1950년대 중반에는 '진승'과 '우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 중국에 세워진 전쟁기념비들에 영향을 미쳤다. 냉전기에 발생한 소련과 중국의 갈등, 북한의 주체사상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군기념비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약화시켰으나, 탈냉전과 함께 소련군기념비는 동유럽과는 달리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확인하는 역사적 기억의 터로 재활성화되고 있다.

용정과 도문의 기념비





소련이 1945년 11월 23일 하얼빈에 세운 소련 홍군의
대일전쟁 승전 기념탑. 소련은 심양, 대련, 장춘,
만주리에도 소련 홍군 기념탑을 세웠다.
탑에는 러시아어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전쟁터에서 전사한 영웅들에게
영원한 영예를', 밑에는 중국어로 '중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동북지방 해방전쟁 작전에서 희생된 소련군
영웅들은 영원히 전하고
불후하리라(为中国的自由与独立, 在解放东北作战中
牺牲的苏军英雄们永垂不朽)고 쓰여 있다.

해방탑(평양, 1947.8/1985)의 딜레마



1948년 2월 촬영된 해방탑 하단부의 조각



신의주 해방탑은 신의주역 근방의 공원에 세워져 있다. 북한의 해방에 소련군이 기여한 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의 여러 장소에 해방탑이 세워졌다. (사실, 이러한 기여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홍군이 한국에 상륙한지 겨우 며칠만에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이다.) 후에 단독으로 일제를 방어한 김일성이라는 전설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해방탑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잃었다. 몇개는 파괴되었고, 다른 것들은 접근불가 장소로 숨겨졌다. 몇개는 아직 남아있는데, 아주 중요한 해방탑은 평양의 모란봉에 위치해 있다. Kernweisser.

다렌(뤼순)의 지정학: 소련군묘지와 중소우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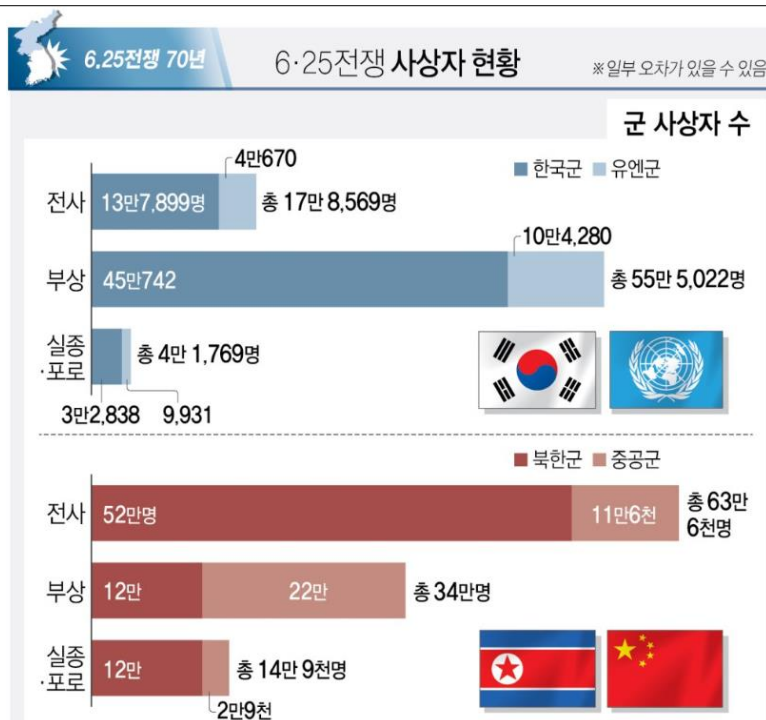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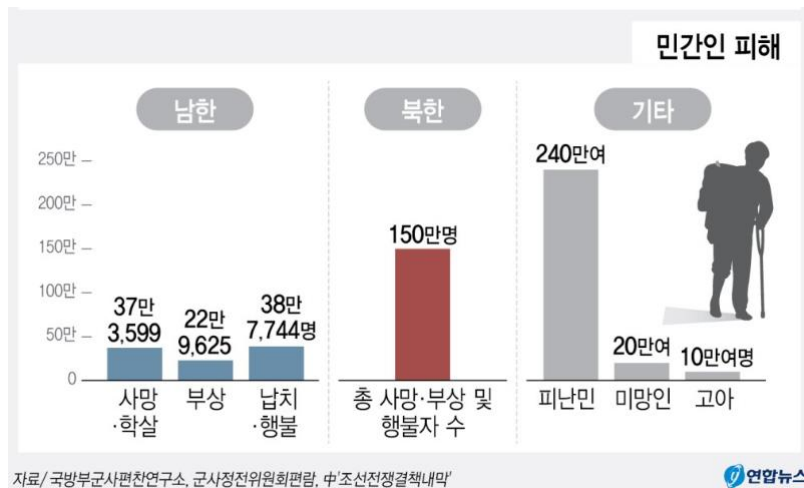
- 1895 청일전쟁
- 1898 러시아의 다렌점령
- 1905 러일전쟁 패배로 다렌상실
- 1945.8 중소우호동맹조약-다렌조차
- 1950.2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
- 1950. 한국전쟁 소련군전사자 묘지
- 1954. 소련군 다렌철수
- 1955. 중소우의비
- 1958. 중조우의비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

	명칭	기념일	기념비/기념관	특징
한국	6.25전쟁	6.25	서울 전쟁기념관	남침 강조 소련, 중국, 북한 음모론: 우방 연대
미국	한국전쟁	7.27	워싱턴 한국전쟁참가자 기념공원	잊혀진 전쟁(승리하지 못한 전쟁) 미군의 고초 강조
북한	조국해방전쟁	7.27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전승 강조(왜곡) 리더쉽 강조
중국	조선전쟁 +항미원조전쟁	7.27/10.25	단둥 항미원조기념관	‘항미원조’ 강조(전쟁과 운동) 중조우의 강조





전쟁의 결과

- 주권: 동맹으로 인한 불완전주권
- 영토: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분경이 공고화, 비무장지대의 유엔사 관리
- 국민: 인구이동, 포로 자유송환, 방첩(내부의 적), 비공식적 등급화
- 교훈: 무력 통일 불가론
- 현실: 점선의 이동(양안, 한반도, 양안, 베트남)
- 국제관계의 변화
- 남북관계: 적대(국가보안법의 공고화)
- 한미관계: 수직적 동맹(혈맹론)
- 한중관계: 적대
- 북미관계: 절대적 적대
- 북중관계: 우호(주도권 역전, 연안과 육상으로 인한 긴장)
- 미중관계: 냉전적 적대(20년)



전쟁의 결과

- 정치적 차원: 집권자들의 권력 독점, 군부의 영향력 강화
- 경제적 차원: 공업시설 파괴/재건(원조경제)
- 사회적 차원: 인명손실, 인구이동, 이산가족, 베이비 붐, 신분적 차별의 소멸, 접경지역 군사화
- 문화적 차원: 군사문화의 지속성, 기억의 재현, 냉전적 심리전

포천 신북면 기지리 방어용 벙커(1948)



-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전차와 장갑차 등을 앞세워 파죽지세로 43번 국도를 따라 남하했다.
- 첫 공격 대상이 된 포천은 국군 제7사단이 38선 경계근무를 맡고 있었고 정면에는 제9연대가 배치돼 있었다. 북한군 병력은 제105전차여단의 지원을 받는 2개의 정예 사단이었고 그중 제3사단이 포천 방향으로 공격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오전 포천은 점령되고 시내까지 북한군이 진입한다. 북한군 제3사단은 이날 새벽 38선을 돌파, 10km 남쪽 만세교까지 돌입했다.

포천 수복기념탑

(이동면 도평리, 1954.10; 영북면 자일리, 1955)



전쟁기념관(1988-1994)



-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 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로 구성
- 대형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옥외전시실
-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조: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형제의 상

건축가 최영집의 기획과 구상, 총괄 제작 지휘



-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참전했던 형 박규철과 [조선인민군](#) 병사로 참전했던 동생 박용철 형제가 강원도 원주군(현재의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에서 일어난 치악고개 전투에서 만난 사실에 기초
- [자유민주주의](#)로 상징되는 형과 [공산주의](#)로 상징되는 동생의 극적인 포용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전쟁기념관 논쟁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쟁기념관 전시 내용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쟁점
- 4.3, 여순사건, 한강인도교 폭파, 베트남전쟁 등
- 민간인 전쟁경험: 피난과 고초
- 3.8선 돌파
- 중국군 참전 배경

부산 유엔군묘지와 거제 포로수용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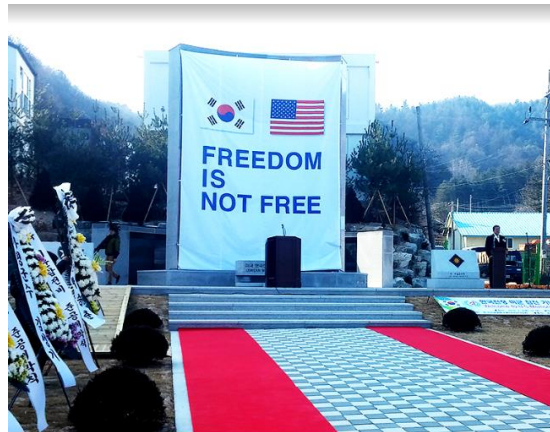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 198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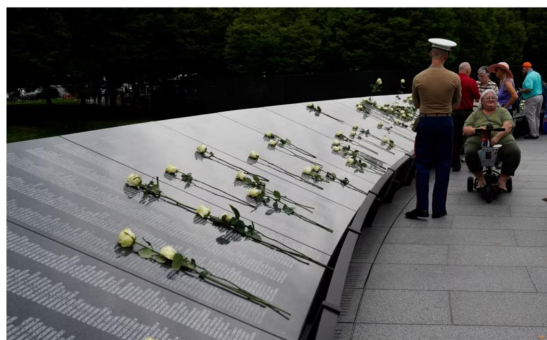




Freedom is not free.



추모의 벽(2022.7)



- 2016년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
- 워싱턴 DC의 한복판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
- 2022 준공
-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 없는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북한의 전쟁기억과 기념

- 전승기념관과 기념탑
- 참전자 묘지
- 소련군 지원 사실 은폐(다렌지 역의 소련군묘지)
- 중국 지원군 묘지(열사릉원)
- 중국 지원군관련 기념탑(우의 탑)
- 주기적 참배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해방탑과 우의탑의 균형)
- 1953년 건립
- 1973년부터 '전승'강조
- 2013년 재개관

2013 재개관



재개관을 앞둔 북한의 전승기념관

회창 중국지원군 열사릉원



- 6.25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가 있던 회창군에 있는 묘지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 열사릉원이며, 여기에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안잉이 묻혀있다.
- 134인 묘지

중국군 철수(1958)와 우의탑(1960)



2023.6. 우의탑 내부 리모델링



북한은 28일 북중전선의 상징인 '우의탑' 내부를 새로 고치는 공사를 끝내고 28일 완공 기념 공사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기념행사에 참가한 북중 참가자들이 새로 리모델링된 우의탑 내부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개성 중공군묘지(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 중공군 묘지는 개성시 방직동, 평안남도 안주시, 평양시 형제산구역, 강동군 및 순안구역 그리고 평안남도 회창군 등 여러 곳에 존재한다.



한국의 중공군 유해 반환/심양 9차 안장식(2022.9.17) 2014년 이래 913구



압록강 단교 국경관광



압록강 단교 기념물



중국지원군 도강 참전





하구 청성교 단교(허커우 단교) 마오안잉(毛岸英)의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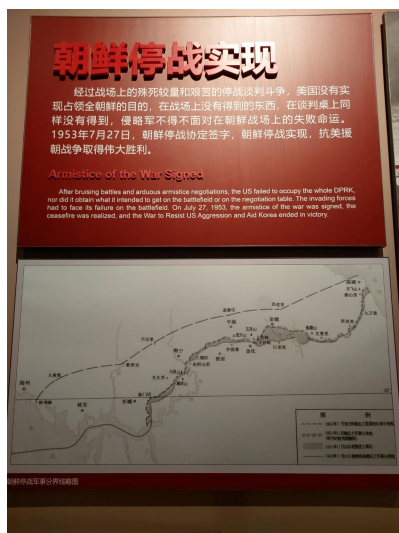
항미원조기념관(2012/1993-2014)



항미원조기념관 (리모델링, 2020)



정전협정에 대한 중국의 시각





우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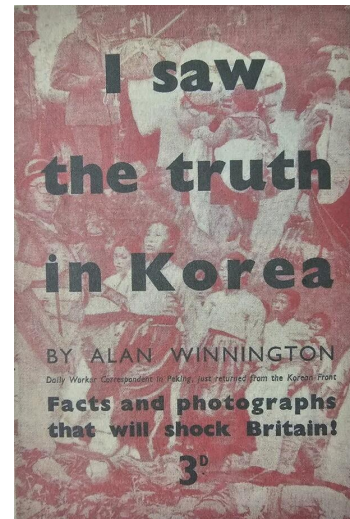
민간인 희생과 관련 법령

단계	주요 대상	지역	법령
1단계 예방학살	형무소 정치범 처형 보도연맹원 처형	대전형무소 등 약 12,000명 규모 미상(등급화)	국방경비법(1948.7) 1948.12 「국가보안법」 1950. 6.28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7.26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2단계 좌익에 의한 학살	인민재판 후퇴기 학살	규모미상 전체 희생자의 22-25% 좌익에 의한 학살의 85% 서남해안	북한군 명령 3)유엔군 상륙 때 지주(支柱)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것. 옥구군당: 1)유엔군 진주 후 적 진영에 가담, 적극적으로 활동할 자를 학살할 것.
3단계 보복학살	부역혐의자 처형 빨치산에 의한 보복	수복과정 산악지역	부역행위특별처리법(1950.12)

대전형무소 정치범처형-골령골



▲ 옛 대전형무소(중구 중촌동) 공중사진.



▲ 대전형무소에서 학살 장소로 가는 군용트럭. 출처: 과거사위원회 2010년 상반기 보고서.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이란 제목의 미국 정보보고서에 첨부된 골령골 학살 현장 사진.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의 총책임자 레너드 애벗 소령이 촬영한 것으로, 고 이도영 박사가 1999년 처음 발굴해 세상에 공개했다.

김해 민간인희생 위령비



- 대전 동구 골령골, 전국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문제, 2012/2017/2022.
- 정근식, <다시 위령비를 세우며>, 다산포럼(광주일보), 2022.12

결론: 다시 제기하는 질문

- 전쟁기념관은 자국중심적이며 국가적 기억을 구현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
- 전쟁기념관과 민간인희생자 추모비의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남북미중의 시각의 차이는 좁혀질 수 있는가?
- 평화주의적 전쟁기억은 가능한가?
- 우방들에 대한 기억을 미래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위원회. 2020)
- 안보와 평화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는 무엇인가?

[강의2] 전쟁의 기억, 화해와 추모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H.D.POLITICAL SCIENCE

2022~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2020-2021 강원대학교 기획처장

2019-2020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2015~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2015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HK연구교수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2021-2022 <국제정치논총> 총괄편집위원

2018~ <담론201> 편집위원장

2020-2022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전문위원

2022~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평화와 통일의 길: 전쟁, 화해 추모

송 영 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War Must End!

- 왜 전쟁을 하는가?
-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가?
- 갈등의 해결 vs. 갈등의 관리



카우보이는 왜 싸우는가?



푸틴 vs. 젤렌스키



과연 이들은 성공한 지도자인가?

지진 vs. 전쟁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한국전쟁

승자는 존재하는가?

죄수의 딜레마

두 공범은
협력할 수 있는
가?





당신의 선택
은 무엇인가?

죄수의 딜레마

자백

보니

침묵

자
백

징역 8년
징역 8년

징역 20년
무죄

침
묵

무죄
징역 20년

징역 1년
징역 1년

군비경쟁

방어력 증강?

공격력 증강?



• TFT이 TFT를 만났을 때 경기 결과

경기자 1의 보수	R R R R R R R R R R ...
경기자 1: TFT	C C C C C C C C C C ...
경기자 2: TFT	C C C C C C C C C C ...
경기자 2의 보수	R R R R R R R R R R ...

• TFT이 항상 배신하는 ALLD를 만났을 때 경기결과

경기자 1의 보수	S P P P P P P P P P ...
경기자 1: TFT	C D D D D D D D D D ...
경기자 2: ALLD	D D D D D D D D D D ...
경기자 2의 보수	T P P P P P P P P P ...

전쟁과 폭력의 상흔들: 용서, 화해?

- 용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용서를 강요할 수 있는가?
- 분노를 포기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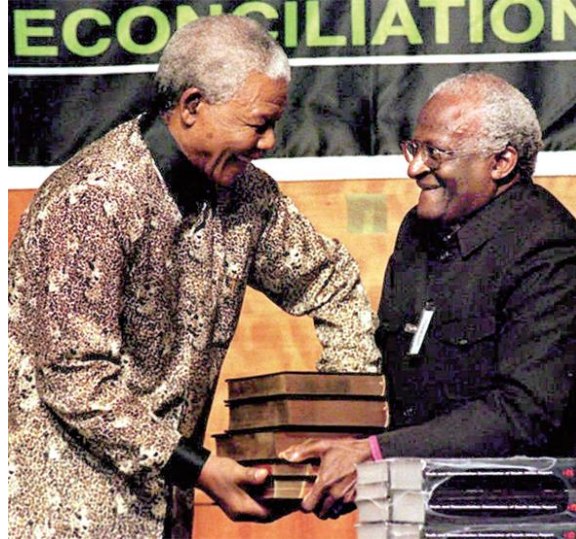
북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



제주4.3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
Unnamed Monument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불가·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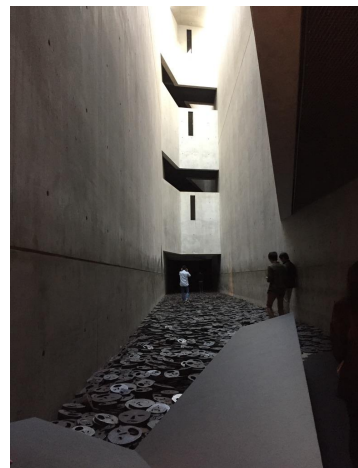
As the Jeju incident still does not have historical definition,
its monument has no inscription.



기억의 방식들

- 피해자의 기억
- 가해자의 흔적
- 기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살의 기억들: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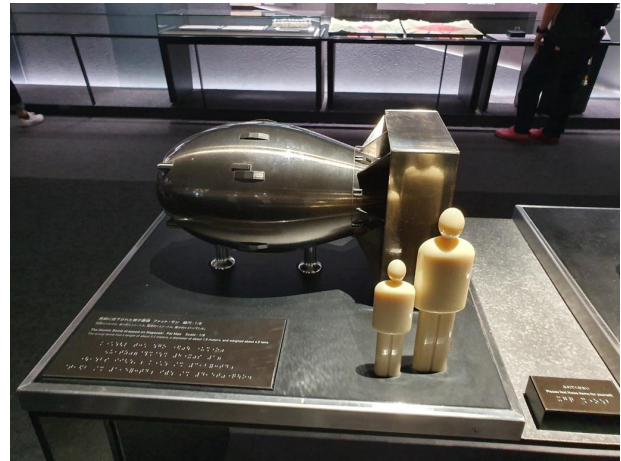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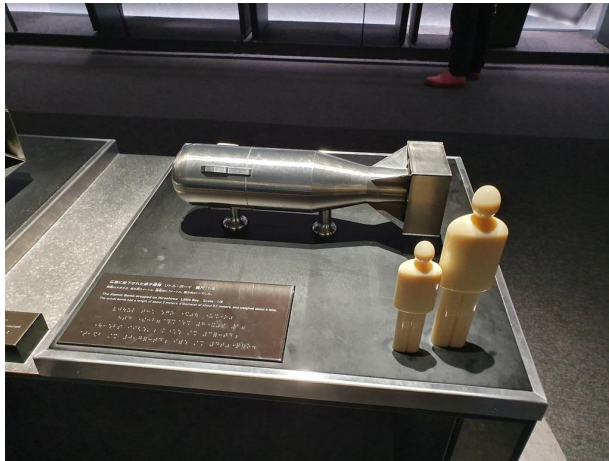


학살의 기억들: 가해



피해와 가해: 중첩된 공간





사과는 왜 하는가?

독일·일본의 과거사 대응	
독일	일본
 앙겔라 메르켈 총리 • 1970년 12월 브란트 총리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 후 무릎 꿇어 • 1987년 1월 콜 총리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거나 숨기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 • 2004년 8월 슈뢰더 총리 "독일인들은 나치의 범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움 속에서 몸을 수그린다" • 2009년 9월 메르켈 총리 2차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무릎 꿇어 • 2013년 1월 메르켈 총리 "우리는 나치의 각종 범죄, 2차대전 희생자들, 홀로코스트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	 아베 신조 총리 •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및 사과 • 1995년 8월 무리야마 총리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과 • 2001년 8월 고이즈미 총리 2차대전 A급 전범 참사된 아스쿠니신사 공식 참배 • 2012년 10월 아베 총리 "(2006~2007년) 총리 임기 중에 아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 • 2013년 1월 아베 총리 고노 담화에 대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관방장관에게 물어보라"고 언급 회피



사라지는 공간의 기억들



파로호의 기억



- 미 제9군단 지휘보고서
- '51.5/24-30, 중국군 2만4141명 사살

further report at close of period.

(3) The 19th ROK Regiment departed via KUPONG at 230700 and attacked northeast in zone toward Phase Line TORPMA. No further report at close of period.

i. ENEMY LOSSES: For 24 hour period ending 242030 K May 51.

UNIT	FIS	KIA	MIA	TOTAL
2ND ROK DIV	36	174	0	510
6TH ROK DIV	17	113	0	135
7TH INF DIV	8	480	60	548
24TH INF DIV	37	443	290	770
IX CORPS ARTY	0	282	0	282
IX CORPS TROOPS	1	0	0	1
TOTAL	99	1797	350	2246

SECRET #15T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653

FOR PERIOD 242100 to 251200 K May 51.

1. COMPOSITION OF FRIENDLY FORCES:

- a. II US Corps CP remained via YOUNG C8620275.
- b. II US Corps ARTY CP opened via C8560670 at 251200 K May 51.
- c. 24th US Infantry Division CP remained via C8901506.
- d. 24th US Infantry Division Tac CP remained via C8618778.
- e. 24th US Infantry Division ARTY CP opened via C8618763 at 242200 K May 51.

(1) 5th US Infantry BATT CP opened via C8676878 at 242200 K May 51 (delayed report).

생각해볼 거리

- 전쟁은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 갈등과 협력은 구분되는가?
- 적과의 동침은 가능한가?
- 진실은 왜 필요한가?
- 전쟁과 폭력의 흔적들을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어떤 조건에서 용서와 화해를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영화상영] <아일라> - 한국, 튀르키예 합작, 2018.



영화 <아일라>는 한국전쟁에 파병된 터키인이 한국의 전쟁고아를 만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아래는 통일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ounikorea/>)에 정리된 영화 <아일라>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입니다.

· 터키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유

터키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UN에 대한 군사원조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1개 여단 병력 파병을 1950년 7월 25일 결정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빠르게 파병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파병이 나토(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터키는 왜 나토에 가입하려 했을까요?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 때문입니다. 당시 터키가 공산주의 위협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터키의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소련은 터키 인근 지역인 이란 북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1944년 내내 터키 국경에 소련군을 집결시켰습니다. 또한 발칸 반도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터키와 맞었던

불가침조약을 폐기하고 터키 동부 국경의 재설정 및 보스포루스 해협에 소련 군사기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터키 정부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기에 터키 정부는 기존의 중립적 외교 정책에서 탈피해 친서방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미국도 1946년 전함을 이스탄불로 파견하여 터키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소련에 전달하였고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며 터키에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 군우리 전투, 터키군의 용맹으로 무사히 철수한 미군

영화를 보다 보면 술레이만이 전투에서 아일라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벌어진 '군우리 전투'를 묘사한 것입니다. 군우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명으로 현재의 지명은 평안남도 개천시 군우동입니다.

터키군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제1·제2·제3여단이 1년 단위로 교대로 참전했습니다. 각 여단은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포병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우리 전투는 그중 제1여단이 치른 전투입니다.

군우리 전투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 미 제8군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작전을 전개할 당시 터키 제1여단이 군우리-순천간 협곡지대에서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철수작전입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터키군이 영웅 같은 용맹으로 4일간의 지연작전을 성공시켜 미군이 포위되어 전멸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미 제8군이 포위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터키군 활약을 치하한 바 있습니다. 군우리 전투는 터키군의 활약으로 중공군의 공격에 의한 미군의 전멸을 막고 성공적인 철수를 이룬 전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돌봐준 터키군과 양카라학교

이 영화는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고국인 터키로 돌아가야 했던 터키군 술레이만과 전쟁고아 아일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녀를 어깨에 태우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의 우표는 술레이만과 아일라의 사연을 담은 것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전쟁 속에서 터키군이 인류애를 보여줬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원 서둔동에는 부모를 잃고 배회하는 고아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 터키군이 수원에 주둔하며 '양카라학교'를 세워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어린 아이들을 휴전 이후까지 돌보며 가르친 곳이 현재의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일대입니다.

양카라학교는 터키군이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한 1966년까지 14년 동안 전쟁고아의 의식주를 해결해준 것은 물론 교육까지 제공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64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양카라학교는 터키군이 철수한 후에 수원시에서 관리했고, 전쟁고아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영화 <아일라>는 그동안 남북관계, 미중관계로만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평범한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실상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평화에 대해 고찰하게 합니다. 즐거운 관람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3]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평화



권재범(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

미국 New York University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정치학 박사

2020-2022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계약교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평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권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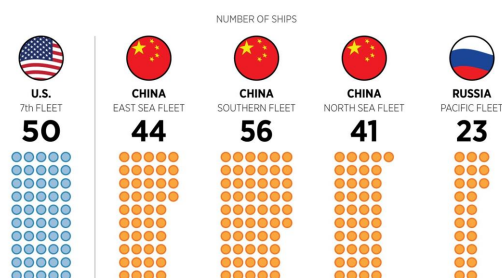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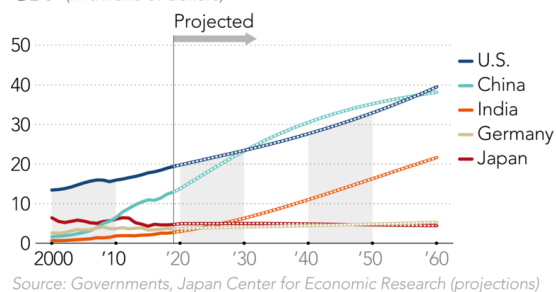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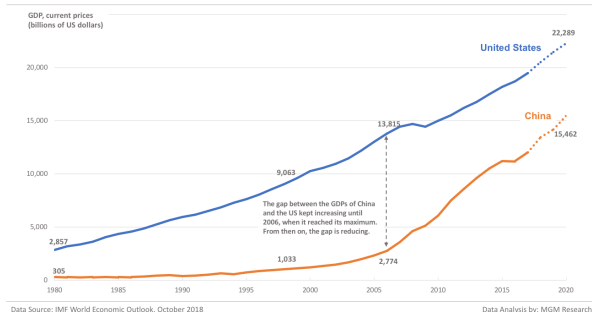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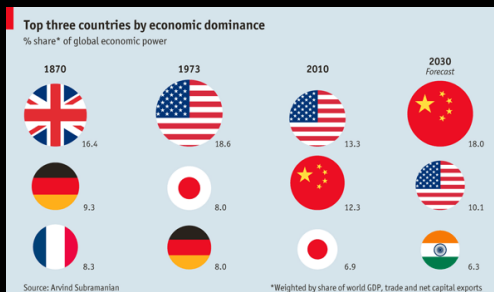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과 미중경쟁

1.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
 - 하드파워
 - 중국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화
 - 아시아의 국가들에 우위
 - 미국과의 줄어드는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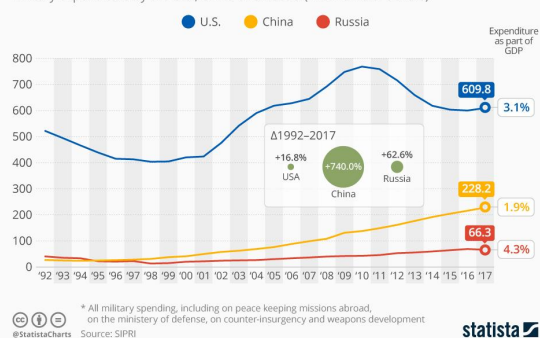
→But...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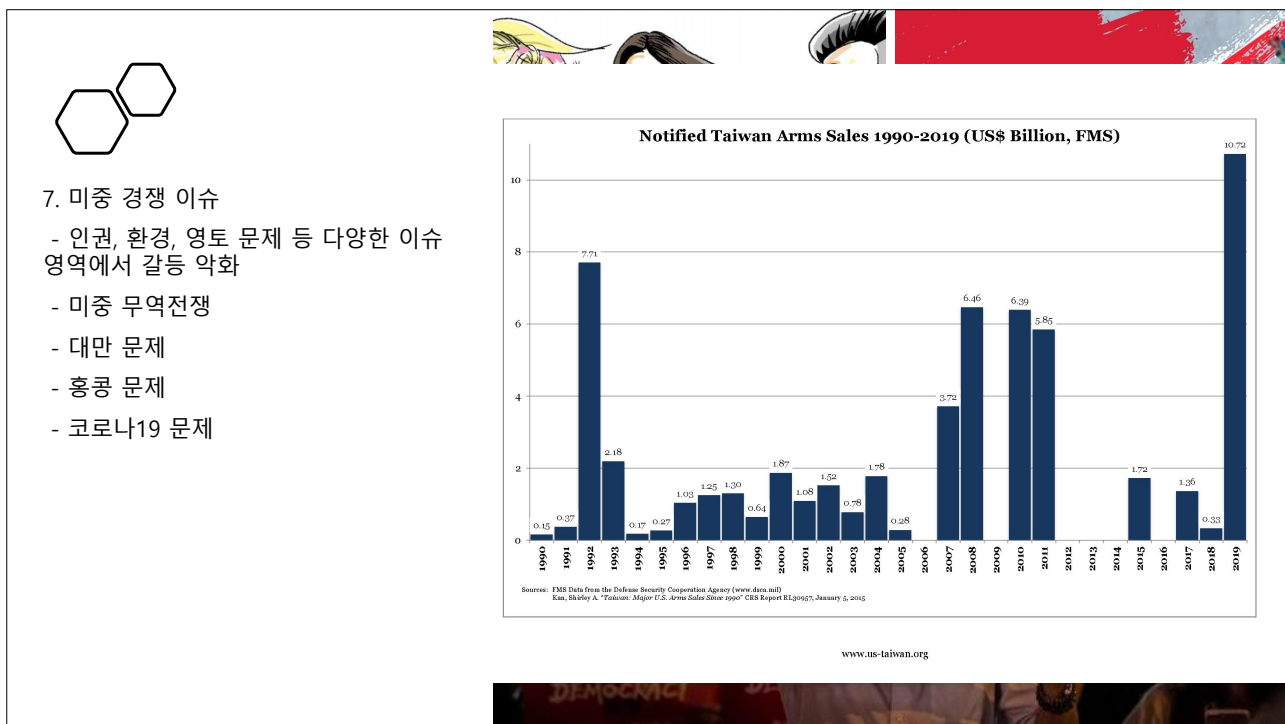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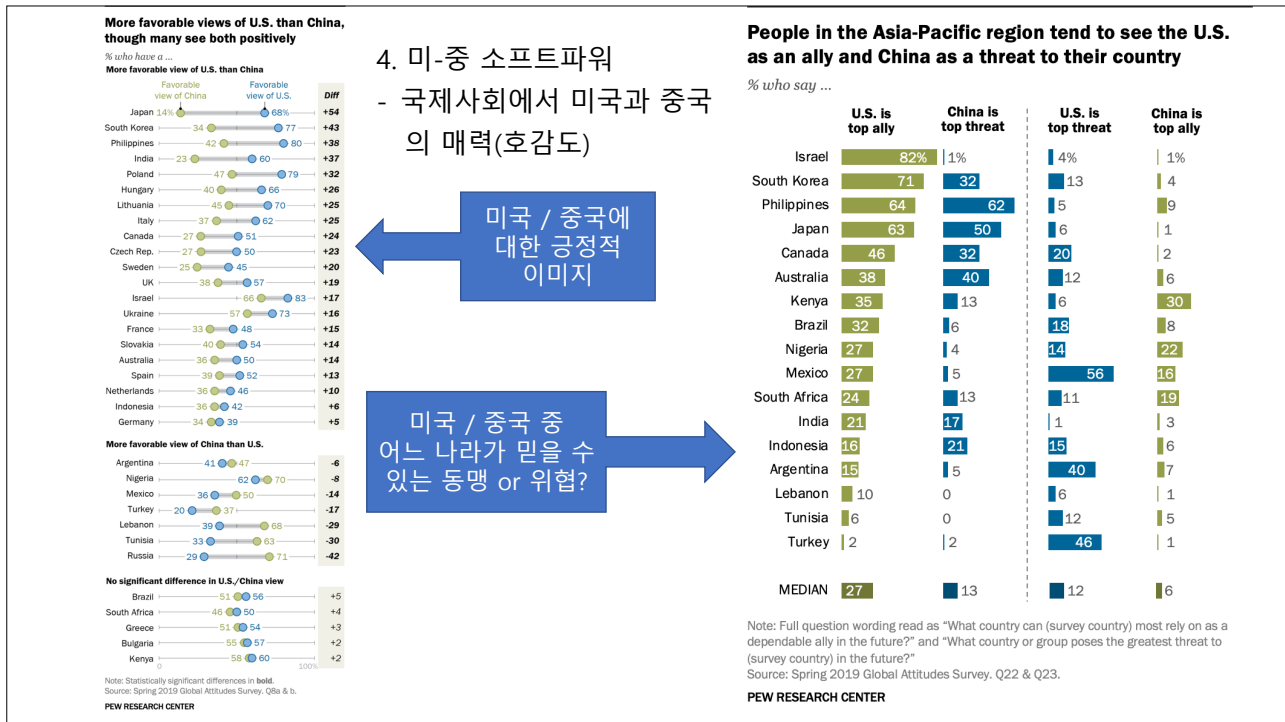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적 성장
- 미-중 간 경제력 격차 감소



SOURC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9* (New York: Routledge, 2019), and Heritage Foundation research and analysis.



3. 미-중 군사력





미국 국방부가 밝힌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한국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들 문제 상아 경제 보복
	필리핀	2009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금지
	일본	2010년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대만	2016년 독립 성향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제재 강화
	스리랑카	2018년 '일대일로' 차관 미상환을 이유로 스리랑카 항만토타항 99년 운영권 확보

→ 중국의 팽창주의적 / 강압적 행위

- 외교: 적극적 다자주의 협의체 설립

(미국 배제)

- 경제: 경제 보복

- 군사: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의 공세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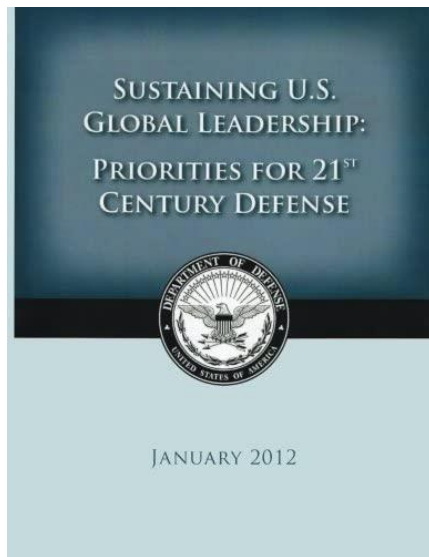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인식 및 목표

→ 2010년대 이후 중국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

→ 2010년대 중반 현상타파국(revisionist)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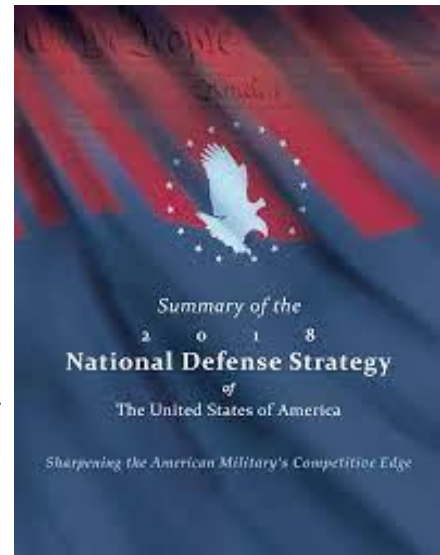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

미중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훨씬 투명해야 함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요인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현상타파 국가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약탈적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이웃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대함



→목표: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및 미국의 패권적 지위 유지
- 중국의 부상 견제 및 봉쇄

2.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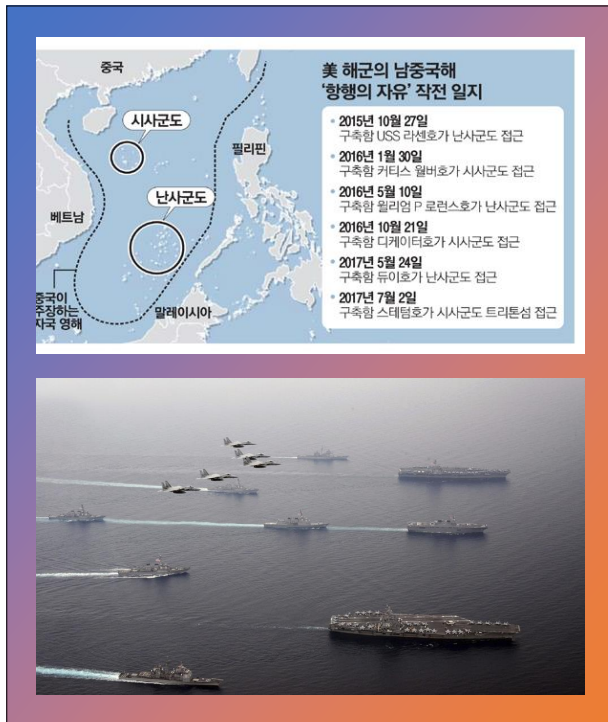
→Pivot to Asia

- 2012년 전후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
- 동아시아에 대한 집중 강화 천명
- 아시아 지역 미국 전진 배치 및 병력 추가
- 미해군 7함대 전력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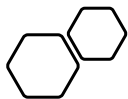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군사/전략적 관계 강화
-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규모/횟수 증가
- 4자안보협의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AUKUS



- 항행의 자유 작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 영토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응한 분쟁수역에서의 미해군 활동 강화
 - ~ 대규모 무력시위
 - ~ 남중국해 / 대만 해협에서의 훈련 강화
- 중국의 영유권 주장 약화 목적



중국의 대미국 전략

1. 중국의 대미국 인식

→ 2010년대 이후 미국과의 경쟁 심화

- 미국: 중국의 성장 / 부상을 봉쇄하는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

- 중국 영토보전의 장애물로 인식(대만문제 / 남중국해 문제)

→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입장 내세움

- 인권, 환경,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갈등 악화



2. 중국의 대응전략

(1) 군사안보적 접근

→역내 미국의 군사력 견제

-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Anti-access/Area-denial: A2/AD 전략)

- 태평양 지역으로 미해군의 진입 차단 및
격퇴 전략

- 지역 내 중국 해군의 전략적 우세 확보



First and Second Island Chains. PRC military theorists conceive of two island "chains" as forming a geographic maritime defensive perimeter.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미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에 대해 협력대응

- 2010년대 이후 국방분야에서의 중-러 협력 확대

- 양자 합동군사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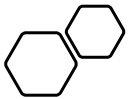
- 무기이전(주로 러시아→중국)

- 국방/안보분야 협정 및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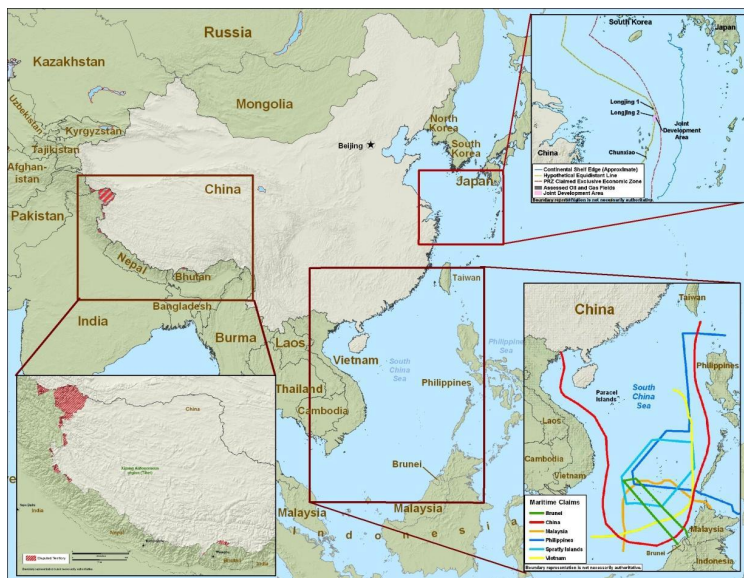
(2) 경제적 접근

-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확대 & 미국의 영향력 견제/약화 목적
- 일대일로 전략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
 - 전 세계 60여 개의 국가와 경제적 협력 및 인프라 건설



- 국제금융기구: AIIB
- 각 지역 포럼: FOCAC / CELAC / 16+1
- 국제/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 ~ 미국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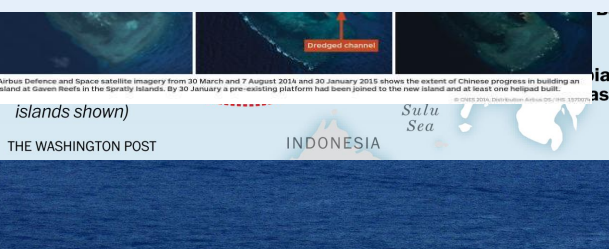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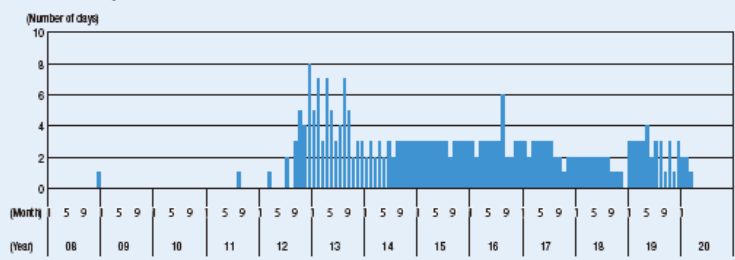




(3)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보전

- 대만문제
- 동중국해문제(with 일본)
- 남중국해문제(with 동남아국가들)
- 히말라야 국경분쟁(with 인도)

Changes in number of days on which Chinese government vessels intruded into the Japanese territorial waters





2) 시진핑 3기 이후...

→ 외교안보라인에 시진핑 측근&강경파 인사 발탁

→ 왕이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대표적 대미강경파
-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24인 포함
- 외교담당 정치국위원 임명: 중국 외교 사령탑
- '7상8하' 원칙을 깬 승진임명
- ~~ 기존 대외정책 추진방향 유지 & 발전 의도



→ 친강 전 주미대사

- 왕이 후임 외교장관 임명
- 중국 전랑외교 상징

→ 허웨이둥 동부전구 사령관

- 정치국위원 승진 및 중앙군사위 부주석 임명
- '대만포위군사훈련' 계획자

→ 대외정책 / 양안관계 강경정책 기조 유지



미중경쟁 시기의 한국

1. 개관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 간 경쟁 심화
 - 미중경쟁 심화에 따른 아시아의 중요성 부상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치열한 영향력 확보 경쟁 진행

→미국: 대중견제전선 합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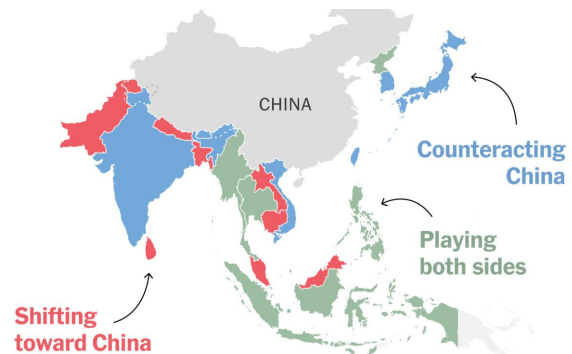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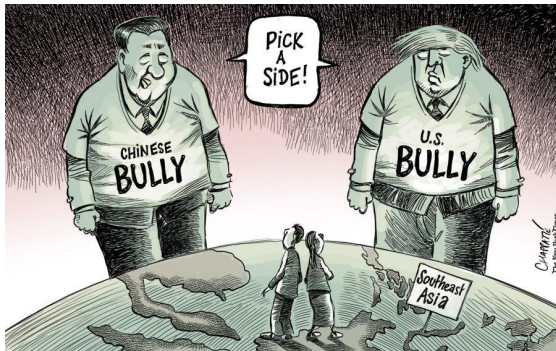
- 반중안보네트워크
(anti-China security network) 참여 유인
- 미국 주도의 경제협업체 구성: IPEF
-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위한 타국의 지지 촉구

→중국: 중국의 이익침해 행위 저지

-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 참여에 대한 타국의 참여 저지
- 중국 주도의 다자협업체/기구 창설
- 미국에 대항한 양자/소다자 안보협력체 구상



- 미국-중국 사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선택 강요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각 국가들의 헤징전략 추진
 - 정치적/전략적/경제적 계산에 바탕을 둔 노선 설정
 - 위험 최소화 + 이익 극대화





한국의 외교정책

1. 미중 간 균형외교

→한국 역시 미-중 사이 전략적 선택의 기로

-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미중 모두 서로의 전략에 동참을 요구하며 선택을 강요
- 중국: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회유와 협박
- 미국: 안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유인책 & 공유된 민주주의의 가치 강조



→ 미-중에 대한 한국의 입장

- 전반적인 안보문제 대응: 미국과의 협력강화 필수
- 경제성장 / 북한핵문제 및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문제: 중국의 지지 필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사이에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 3년 한·미·중 관계 변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2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을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과 함께 참관하고 있다.

중국 전승절 참석

관계	상태
한·중 관계	강화
한·미 관계	긴장

시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25일 청와대에서 배워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관계	상태
한·중 관계	갈등
한·미 관계	강화

미중 외교 핵심 현안별 한국 입장

미중간 외교 현안	성격	한국 입장
쿼드(QUAD) 참여	안보 이슈	"중요성을 인식"
대만 문제	안보 이슈	"평화·안정 중요"
남중국해 문제	안보 이슈	입장 없음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인권 이슈	입장 없음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인권 이슈	입장 없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인권 문제	보이콧 고려 X
미국 공급망 참여	경제 이슈	"새로운 유대 형성 약속"



2. 다양한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주변국: 일본 / 러시아 / ASEAN 회원국 등

- 양자수준의 경제/정치적 협력관계 심화
- 상호간의 교류 확대 추진

→주요 목적

- 한국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지지 확보 및 정책 추진의 수월성 확보
- 자원/에너지/통상 등 경제성장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 역내 재난구조/환경문제/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비전통안보문제 공동대응
- 대미/대중 외교의 의존성 축소 + 전략적 자율성 확보

→협력의 지역적 확대

- 역내 협력에서 벗어나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플랫폼 구축
- 경제적으로 시장의 다변화
- 정치/외교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책 소개 및 지지 확보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 2011년부터 매년 카리브 국가 및 지역기구 대표를 초청하여 한-카리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채널
- 국제협력 · 녹색성장('11) / 전자정부 · 해양환경('12) / 관광('13) / 한-카리브 공동번영('14) / 신재생에너지('15) / 기후변화 · 식량안보('16-'17) / 평화안보('18) / 기후변화대응('19) / 보건협력 · 식량안보('20) / 디지털 · 녹색협력('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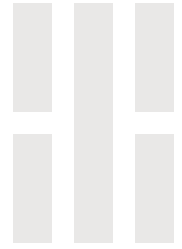
3. 중견국 외교 추진

- 국제무대에서의 독립적 역량 구축 및 선도적 역할 추구
-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추진
 - 국제규범 확산: 인간안보 문제(인권 등) 해결 위한 규범형성에 기여
 -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지부진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적극적 역할 담당



→MIKTA 참여

-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5개국간 협의체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대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 간의 협력 매커니즘
- 에너지 거버넌스, 테러리즘 대응, 경제통상 협력,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유엔평화유지 활동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



5. 여름캠프 답사지





[답사1]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전쟁의 교훈과 호국정신 배양, 선열들의 호국 위훈 추모를 목적으로 1990년 9월 착공해 1993년 12월 완공하고, 1994년 6월 10일 개관한 기념관이다. 연건평 2만 5천 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호국 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다.

기념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외에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

교육, 기념관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부, 전쟁에 관한 학예 활동, 전쟁사 연구 등 전쟁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호국추모실은 역대 수많은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선열들의 호국 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민족 자존의 혼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16만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 명부가 봉안되어 있고, 귀면무늬의 수호상, 호국 인물들의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쟁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각종 대외항쟁 군사자료, 무기와 장비, 호국선열들의 위업 등에 관한 자료들이 시대별로 구분 전시되어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 무기 박물관이며,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전 국가들의 대형 국기 및 기념비 등을 볼 수 있다.

[답사2] 파주 통일촌마을

1973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2개의 통일촌(統一村)을 건설하였다. 통일촌은 국가가 직접적인 어떠한 목적에 따라 마을을 만든 전략촌에 해당하며,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목적과 전선 방위와 유희 경지 활용의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통일촌은 우리나라 내륙 최북단에 있는 선전마을로서 정부가 1973년 주택과 경작권을 제공하고 263명을 이주시켜 조성한 곳이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는 황무지 및 유희 농지를 개간하여 식량 생산과 안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전략촌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가구당 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식량 증산을 위한 유희 경지 활용, 전선 방위, 대북 선전 기능의 강화 등 다양한 건설 이유가 있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육안(肉眼)으로 식별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북에 알리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 아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영농 희망자를 엄격히 선발하였다.

현재는 파주 민통선을 출입하는 다리 중 하나인 통일대교를 지나면 특산물인 장단콩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판장과 농특산물 홍보관 이외에도 통일촌 내의 학교, 교회 등을 볼 수 있다.

[답사3]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갤러리그리브스, 독개다리 및 벙커전시관

■ 제3땅굴



제3땅굴은 북한 귀순자의 땅굴공사 첩보를 근거로 1978년 10월 17일 비무장지대안에서 발견되었다. 군사분계선의 서쪽 1.2km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에서 지하평균 73m의 암석층을 굴착하여 1,6km가량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폭 2m, 높이 2m의 아치형 구조로 1시간 당 3만명의 병력 이동이 가능한 규모로 서울까지는 불과 52km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다른 땅굴과 비슷하나 서울로 침투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위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땅굴의 총 길이는 1,635m이나 관광객 안전상 265m만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쪽 방향에는 3개의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제3땅굴에는 DMZ 영상관, 전시관 및 상징조형물, 기념품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도라전망대



서부전선 최북단을 지키고 있는 도라전망대는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1.5km 떨어진 해발 167m의 도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1월 개방 전까지는 비무장지대여서 출입이 불가하였다. 2018년까지 30여 년간 사용되던 옛 도라전망대는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일반인 관람은 중단하고 군장병 안보교육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 관광객은 신 도라전망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22일 옛 전망대에서 12m 높은 곳에 둥근 외벽 디자인으로 평화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여 지상 3층 규모

로 신 도라전망대를 건립하였다. 도라전망대에 올라서면 DMZ와 개성공단, 개성시가지 뿐만 아니라 북한선전마을,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진각과 북한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관광지이다. 1972년 임진각이 세워진 후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있다. 임진각 안에 있는 경기평화센터는 약 3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지하 1층에는 세계 희귀 패류, 1층에는 북한의 생활필수품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서는 최근의 북한 실상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며, 3층은 평화전망대로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 일대를 볼 수 있다.



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1985년 조성된 망배단(望拜壇)이 있다. 매년 명절 때면 실향민들이 이곳에 와서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곳으로 향로와 망배탑이 있다. 망배단 뒤쪽에는 1953년 건설된 자유의 다리(경기기념물 162)가 놓여 있다. 길이 83m, 너비 4.5~7m, 높이 8m로 목조와 철조를 혼합하여 만들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 한국군 포로 1만 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라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외의 평화의 종, 경의선 장단역 증기 기관차 등을 볼 수 있으며, 2020년에 개장한 평화 곤돌라를 타면, 군사보호구역을 지나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

■ 갤러리그리브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미군 기지 중 한 곳이며, 미2사단 506연대가 머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미군철수 이후 철거위기에 놓였지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13년 민간인들을 위한 평화통일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민간인 통제구역 내의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 안에 있는 갤러리 그리브스는 미군 주둔 당시에 볼링장으로 사용된 공간을 2020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전시, 휴게 공간으로 리뉴얼되었다. 전시 주제인 ‘두개의 시간’은 6.25전쟁의 모습만이 아닌 전쟁에 맞설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

기획전시인 ‘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젊은 날’은 1950~2023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젊은 날의 초상을 만나보는 전시이다. 어린 나이에 UN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파병 용사, 학도병, 소년소녀병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어리고 젊었던 용사들을 만난다.

■ 독개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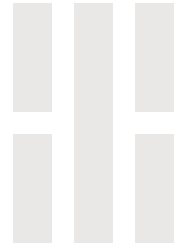


‘임진강 독개다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복원한 것으로,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교각을 활용하여 길이 105m, 폭 5m로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하였으며, 과거·현재·미래 구간으로 구성된 다리를 걸으며 전쟁의 상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벙커전시관



BEAT 131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군 지하 벙커로서, 내부는 군 상황실과 영상체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실과 군용물품의 관람이 가능하며, DMZ와 북한 마을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6. 통일촌, 전략촌 참고자료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

— 장벽, 전시장, 캠프

전원근

한글요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라는 관념과 공간 구성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논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분석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통일촌의 건설과 운영을 살펴본다. 한국전쟁 이후 장기화된 식량부족의 문제는 민통선 이북지역 개간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경제적·인구학적 필요성은 남북간의 대치와 냉전이라고 하는 안보의 논리와 충돌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곧 전방의 개발과 군사화 속에서 ‘전략촌’이라는 형태를 통해 이 둘의 논리를 절충하였다. 먼저 전방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남한과 북한, 우리와 적을 나누는 한편, 국토 내부의 위험한 전방지역과 안전한 후방지역을 나누는 이중의 장벽으로 기능했다. 그것은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와 더불어 민북지역 개발과 민통선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로 통제된 전방은 적과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국민들을 향한 선전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당시 통치 권력이 꿈꾸는 이상촌의 모습으로 건설되었고, 그 성과들은 국민에게도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촌은 특정 목표의 수행을 위해 인간과

전원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본 연구는 2019년도 통일연구원(KINU)의 연구용역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은 추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구성되었음.

** 본 논문은 2020년 2월 6일 한국냉전학회 냉전사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귀중하고 유용한 코멘트를 해주신 토론자와 사회자 선생님, 그리고 한국사회사학회의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와 역사 제125집(2020년) 한국사회사학회



사물의 이동성과 속성들을 통제하고 별도의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예외공간으로서 캠프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체와 사상, 사회적 경력과 가족구성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입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국가와 군의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 가지는 정치경제학과 문화적 효과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의 논리와 상상을 위해 전방이 해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요어

전방, 경계, 안보-경제 연계, 장벽, 전시장, 캠프

1. 들어가며

2019년 남북 감시초소(GP) 시범철수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군사화가 중단되고 역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정국에서 NLL의 정치쟁점화가 그랬던 것처럼 일부는 이를 전방의 포기나 안보 무능력 등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전방이 현실의 권력구조나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DMZ, NLL, 민통선 등 국경 아닌 경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추적하는 일은 냉전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촌의 건설을 사례로 한국사회의 특수한 공간구성의 논리이자 담론으로서 작동해 온 ‘전방’의 존재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전방’은 뉴스나 일상 대화 속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안보관광과 군복무를 통해서건, 전방의 군인 아저씨에게 위문편지를 쓰는 경험이나 정치인들의 위문 방문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서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방을 경험한다. 그리고 전방과 연계하여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국가와 국토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하는 태도들을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 전방은 ‘끝나지 않은 전쟁’, 군사적 위협과 안보,

낙후된 변방과 부채감, 지켜야 할 영토와 보존해야 할 국토자연, 군사적 남성성 등 다양하고 중첩된 의미구조들과 연결되어 있다.

민간인통제선이나 접경지역과 달리, ‘전방’이나 ‘후방’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일상화된 군사 용어이며, 편의에 따라 선형적인 것(경계선)으로 상상되기도 하고 면적인 것(경계지)으로 상상되기도 한다. 전·후방은 군사작전이 시행되는 전장이나 전구(theater) 또는 적과의 대치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러한 지역을 위한 보급 및 병참으로서의 공간을 나누는 용어이다. 국토를 특정한 군사용어로 나누고 지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그것은 국토와 경계지역을 어떠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상상력을 구조화하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연구는 냉전기 전방의 개발과 통일촌 건설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전방’의 현대적 의미체계가 ‘장벽’, ‘전시장’, ‘캠프’라는 세 가지 공간적 형태의 중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1968년부터 1973년 사이라는 특정 국면에 국가에 의해 극적으로 이루어진 민통선 북방의 개발과 통일촌의 건설을 중심으로 전방지역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확정되어왔는가를 추적하는 시도이다. 그간 DMZ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자연과학적·인문학적) 자원조사나 경제교류와 관광개발 등 자본의 논리 또는 관리·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다(박배균 등, 2019: 13)는 것을 돌이켜 볼 때, 이 연구는 경계 지역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권력의 영토논리(territorial logic of power)’ 또는 ‘통치성의 공간들’¹⁾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시도이기도 하다.

1) 김동완(2013)은 공간연구가 주로 ‘권력의 자본논리(capital logic of power)’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권력의 영토논리’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그는 푸코의 통치성 분석을 도입하면서, 중화질서, 탈식민, 분단과 냉전체제 등 한국의 통치술이 수행된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국면들 - ‘품행의 지도(conduire des conduits)’로 연결되는 정교한 장치들의 발달사 -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냉전기 남북한 경계의 성격

경계연구는 많은 이들이 경계(border)를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사물로 믿고 싶어 하지만 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오래전부터 분석해왔다. 최근 이러한 흐름에 기반한 DMZ나 접경지역, NLL 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한반도 경계의 형성과정과 성격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모니까(2017)는 인제군의 사례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통치 기간 동안 경계의 형성이 중앙권력과 지역사회의 상호관계 속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섬세하게 분석하였다. ‘냉전경관’에 대한 연구들(정근식, 2016, 2018; Jung, 2019; 지상현 등, 2018; 전원근, 2019b)은 DMZ나 NLL과 같은 경계를 단순한 선에서 사회·역사적 구성물로서 경계지(borderland)와 경관의 형태로 볼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박배균 등(2019)은 한반도 경계와 통일의 문제를 근대적 영토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바라볼 것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명규(2012)는 남북간 경계의 문제를 공간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정체성과 비대칭성의 차이들로 분석하였다.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은 주변국들과 맞닿은 명확한 국경의 형성과 함께 했다(Elden, 2013). 반면 전근대 시기에는 명확한 국경선이라기보다는 완충지대로서 변방이 각 정치체 사이에 존재했다. “각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경계선이 바로 다른 지역민중의 경계선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들의 경계에 황무지땅이 연결되어 있었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Simmel, 1992: 784; 슈뢰르, 2010: 212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슈뢰르는 그런 공간이 근대에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제 ‘제3의 국가’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완충지대와 국경선은 그 맥락에 따라 경계가 작동하는 기능들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포페스쿠(2018: 39)에 따라 변방과 울타리라는 경계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변방(frontier)은 ‘앞(front)’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완충지대와 점이적인 구역을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안팎의 “접촉과 외부지향성을 의미”하며, 울타리

(boundary)는 ‘가두다(bound)’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선형적인 “영토적 한계와 분리, 내부지향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남북 사이의 경계지로서 DMZ 일대는 변방과 울타리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DMZ의 역사적 변화 과정은 이 두 가지 속성의 경합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의 교두보가 될 외부지향적인 경계에서 군사화되고 엄격히 통제된 내부지향적인 경계로의 변화, 그리고 다시 교류와 협력을 희구하는 외부지향적인 경계로의 전환과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방’이라는 개념은 이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전방은 분명히 남북 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한국을 일종의 섬과 같이 가두는(boundary) 역할을 한 반면, 동시에 여전히 이 경계지대를 정치군사적·이데올로기적 목표로서 ‘국토통일’이라는 외부지향성을 가진 전초기지(frontier)이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완충지대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방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감히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전방은 단순히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들과 논리, 태도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전방’이라는 관념은 DMZ 일대를 냉전분단체제의 통치적 장치로 만들기 위해 경계의 공간적 속성들 중 일부를 국가권력이 선별하고 조정한 산출물이자 이 지역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간 구성과 운영의 논리체계인 것이다. 이 논리체계는 전방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성의 관리와 통제 방향을 규정하고, 경계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정치·경제적 논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배균과 백일순(2019)은 한반도 접경지역이 가지는 중첩적이고 혼종적인 성격을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로 개념화한다. 경계와 영토는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 간의 경합과 결합, 절충으로 구성된다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접경지역²⁾은 각

2) ‘접경지역’이라는 용어 또한 이곳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또 하나의 역사적 구성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접경지역은 탈냉전의 진행 이후 이 지역의 교류와 활성화가 담론화되면서 나타났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2000년) 등



역사적 국면마다 지배적인 안보-경제 연계의 논리들에 의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방’이라는 관념과 논리체계는 특정한 시기와 조건에 의해 구성된 한반도 경계지에 대한 안보-경제 연계의 하나의 지배적·대중적 논리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전방은 구체적으로 경계의 어떠한 논리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전방의 대규모 군사화와 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만들어진 ‘통일촌’의 사례를 통해 전방의 의미구조를 장벽, 전시장, 캠프라는 세 가지 기능적 형태로 유추하고자 한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기 동안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국경이 아닌 경계들 - 분경³⁾ - 의 역사적 맥락이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에서 DMZ와 분단선, 전방과 전연(전방의 북한식 표현)은 ‘원래’ 하나여야 하는 민족국가의 영토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양대 냉전세력의 완충지대로서 위치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냉전 속의 한국은 양대 진영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들을 일종의 ‘방파제’로 만든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희생물이자 수혜자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의 영토는 양대 진영의 최전방 기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⁴⁾ 전방으로서 영토가 가지는 위상이 미국의 경제

으로 이어졌다(박배균·백일순, 2019). 한편 ‘접경지역’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는 것은 경계의 문제를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 정근식(2018)이 휴전선이나 민통선, NLL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분단선 및 양안 사이의 경계를 ‘분경(分境)’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분경이 일반적 의미의 ‘국경’이 가진 의미와 기능을 넘어 경계짓기라는 근대성의 한 차원이 냉전이라는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사건과의 연관 속에서 수행되는 근원적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냉전 속에서 진행된 경계짓기이며, 동시에 경계지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개념화한다.
- 4) 신옥희(2005: 254)는 한국이 미국에 가지는 포괄적인 안보 이익을 분석한 1965년과 1968년 미 정부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한국의 가치가 다음과 같이 요약됨을 분석하고 있다.
 - (1) 일본과 공산 아시아 사이의 완충지로서, 그리고 아시아 본토에 대한 자유세계의 전진 방어기로서 한국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
 - (2) 비공산주의적인 국가건설을 선전하는 사례로 한국을 유지하는 것
 - (3) 우방으로서 미국의 동맹과 지원의 신뢰성, 혹은 의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을

적·군사적 원조, 그리고 정권의 안전보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전방’이라는 논리가 단순히 언표적 차원이 아니라 실재하는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DMZ 일대는 다시 한국 영토 내부의 전방으로 위치됨으로써 국제적 층위와 남북관계라는 층위를 통해 이중의 전방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전방지역의 관리와 통제가 적어도 1954년 유엔군의 행정권 이양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식민지 경험과 분단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영토(국토)가 가지는 의미와 감정적 애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호랑이 모양이나 무궁화로 뒤덮인 한반도 표상, 삼천리 강산과 팔도강산이라는 관념들은 한국에서 영토가 가지는 민족주의와의 강한 연결성과 역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남북 사이의 경계지대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위해 가로질러야 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식민주의와 분단, 전쟁을 거친 한반도 주민들에게 있어 이 공간은 임시적인 것일 뿐 국민국가의 영역을 규정하는 영속적 경계가 아니었다. 헌법에서 정의된 영토의 범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후의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으며, 이들에게도 DMZ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한시적인 경계일 뿐이었다. 오히려 이것을 막은 것은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아 냉전 구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이었다. 정종현(2009)이 이태준의 소설과 당시 신문들을 통해 분석하듯이, 38선과 휴전선이라고 하는 임시적 경계선들이 양 진영 및 양 국가 간 사이의 분경으로서 물질화, 영속화되는 과정은 대중들의 심상지리와 지정학적 상상의 내면화 및 개개인들의 정체성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강화되었다. 그는 공격적인 북진통일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의 ‘회복’, 즉 국토개발을 주장했다. ‘국토’는 국민국가와 영토, 그리고 국민으로서 민중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고 그것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관념이다. 1961년 군사정변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를

유지하는 것.

전원근 /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내세우며 경제개발과 함께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현재 ‘국토종합계획’)의 기원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2003년 ‘국토기본법’으로 개편)에 있지만,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구상안이 만들어졌다.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국토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국토의 근대화를 공약하였고,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어졌다. 국토의 통일은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 자주국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므로, “통일への 길은 건설뿐이며 건설만이 통일への 지름길”(문화공보부, 1971)이라는 국력배양론을 통해 주장되었다.

이렇게 국토개발은 전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 주민에게 있어 통일은 더 이상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반공 안보국가는 이러한 탈식민주의적 열망을 국력배양과 국토개발을 통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통일’이라는 개념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통일을 위한 협상과 교류 등 실질적인 목표의 추진을 뜻하기보다는, 언표수준에서 국가 내부의 통일담론을 선점하고 틀 짓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방의 경계지역은 언젠가 도래할 국토통일과 국토의 수복을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통일은 반공국가의 튼튼한 안보와 국력에 의거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 그것을 위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는 통일이라는 탈식민주의적 과제가 ‘국토통일’이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축소(전원근, 2019: 53)되는 과정이었으며, 경계의 내부지향적인 속성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1968년 1월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정점에 올랐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급증이 있다. 1966년 경부터 증가한 무력충돌은 철책과 지뢰, 초소 설치 등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를 동반하였으며, 주변부 국토를 ‘안보 취약지구’로서 바라보게끔 만들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일종의 내지 개발에 해당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변방 개발로서 ‘취약지구종합개발’로 이어졌다. 이 구상에서 국토

주변부의 개발은 국토의 재건과 자급자족이라는 경제적 개척의 의미와 함께 안보의 강화라는 의미가 결합되었다. 간척 사업과 도서개발 및 전략촌 건설은 대표적인 국가의 주변부 개발 사업이었다. 1945년도부터 1958년 출입영농이 시작된 시기까지를 경계 형성의 제1차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이루어진 군사화와 주변부 영토 개척·개발은 경계 형성의 제2차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전방의 요새화와 전략촌 건설, 서해5도의 요새화, 수도권 그린벨트 조성⁵⁾과 군사 시설보호법 제정 등 전방의 안보-경제 연계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 구성의 기본 틀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북지역 개발은 식량의 자급자족과 안보취약지구의 군사화라는 안보-경제의 융합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분경의 냉전경관들은 ‘안보관광’을 통해 오랫동안 분단과 영토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을 구조화해왔다(Jung, 2019).

이처럼 냉전과 분단의 경험들은 분단선과 국경, 외부지향성과 내부지향성, 경제적 필요성과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다양한 의미들이 분리불가능한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전방’은 이러한 경계 구축의 논리와 상상, 권력의 연결성을 드러내는 한국적인 경계의 형태이자 개념이다.

3. 장벽, 전시장, 캠프로서 전방의 구축

I. 장벽: 민북지역 개발과 군사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국가가 직접 개발과 관리에 나서기 전까지 민통선(귀농선; CCL) 이북의 경계지역은 지금과는 달리 다공성의 경계지역이었으며, 중앙권력의 공백 속에서 사적인 권력이 경계관리의 제도적·물리적 허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철원의

5) 장세훈(2017)은 그린벨트의 구상이 환경보존과 난개발 억제라는 명목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수도권 군사시설을 은폐하고 보호하는 군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동호농장개척단’⁶⁾ 사건을 볼 수 있다. 남북한 또한 서로의 허점을 이용하며 군사적 도발을 주고받으며 비정규전을 이어갔다.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정점에 오른 경계침범에 대한 위기의식은 결국 휴전선과 민통선을 중심으로 한 이 경계지역을 이중의 장벽으로 강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나아갔다. 그것은 첫 번째로 휴전선을 따라 설치한 철책과 지뢰, 감시초소 등 외부(북한)로부터 내부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물리적 장벽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내부의 국민을 통제하고 영토를 위협한 전방과 안전한 후방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벽으로서 민통선의 기능 강화였다.⁷⁾ 이는 전방의 기본적인 공간적 속성으로서 경계의 내부지향적 통제의 기능이 선택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시기적으로 보자면, 식량난에 따른 민통선 이북에 대한 개발 요구의 등장, 심화된 남북의 군사 충돌과 안보인식의 변화, 경제적 요구와 안보 논리의 절충으로서 민북지역 개발과 전략촌의 건설이다.

먼저 1960년대 지속된 보릿고개와 식량난은 귀농선(민통선)의 북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1954년 민북지역에 대한 행정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서 유엔군은 큰 지장이 없는 한 이 지역의 농경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군은 출입영농제도를 통해 민북 지역

6) 1962년 철원군 동송에 제대군인들이 동호농장개척단(단장 오필생)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적인 관계를 통해 군부대와 연계하고 민통선 북방의 출입영농을 주관하였다. 전후 이미 전방지역의 많은 군부대들은 부대 주변에서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화전민이나 농민들의 출입영농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영토개척에 관여하고 있었다. 동호농장개척단은 82명의 해당지역 제대군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철원군의 간접으로부터 자유롭고 군부대와 결탁하여 영농출입증과 출입통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였다. 이들이 민북지역 토지를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게 되자, 결국 1964년 불만을 가진 농민 3천여 명이 몇 차례에 걸쳐 동송면에서 독점반대 시위를 벌임으로써 개척단은 해체되었다. 이후 경계지역의 개발은 국가의 독점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자료: 철원신문(2016.4.27.), 「(연재) 42) 수북지역 철원은 집과 땅과 돈을 그냥 주는 곳」(검색일 2020.3.1.)

7) 분경의 이중적 장벽으로서의 기능은 한국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대만과 중국대륙 사이에 위치한 금문과 마조 열도 또한 중국대륙과 대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나누는 한편 위험한 전방 열도지역과 안전한 후방의 본토를 나누는 이중의 장벽으로 기능했다(정근식·김민환, 2016).

에 제한적인 농경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제한을 보다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었다. 1966년의 국회 국방위원회 제57회 14차 회의록에는 「귀농선 연장에관한건의」가 안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지철 의원 등 31인은 식량증산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의거하여 귀농선을 휴전선 남방 1km까지 연장(북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군 작전상의 지장과 “상당한 지역에서 명시적은 아니나 귀농선을 꾸준히 수정하여 왔었”⁸⁾다는 이유로 이 제안은 폐기되었다. 이 회의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민북지역 영농이 군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하면서 전략촌과 비슷한 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건의안은 귀농선 연장에 대한 제안이유로 식량증산과 귀농민에 대한 소득증가를 들고 나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휴전선이란 특수사정을 배려하여 동지역내에서의 영농은 일반인의 개별적인 활동을 원리적으로 건제하되 집단영농 형성의 공동경작을 채택하는 방법과 재향군인에 의한 조직된 집단개척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선행 실천함으로써 작전지구의 안보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음(국방위원회 제57회 14차 회의록, 1966.7.16.)

비록 이 건의안은 국방부 등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이듬해인 1967년부터 취약지구 종합개발계획과 전략촌 및 전방 철책 건설 등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부 영토개발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식량증산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남북간 군사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자들에게 경계지역이 구멍이 뚫려있는 ‘안보 취약지구’로 인식되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로 연계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는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와 요새화를 통해 외부(북한)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민통선과 민간인통제구역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민간인의

8) 한편 앞서 귀농선이 꾸준히 수정되어 왔다는 것은 귀농선이라기보다는 별도로 軍에서 지정한 ‘출입영농한계선’으로 판단된다.

기지나 훈련장 주변의 농민들 때문에 훈련 등 작전수행에 곤란을 겪고 지방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산림보호, 국토 보전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1965년부터 화전민 이전사업에 착수하였다.⁹⁾ 정부는 1965년에만 3,000호를 이전시키고 주택을 건설하고 미개간지를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966년에는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화전을 정리하고 산림을 복구하였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경계침범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로도 인식되었다. 특히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취락지 대책사업으로서 화전정작 금지에 박차를 가하였다. 화전지역이 적 침투로상의 용이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을 외딴 산간에 서 평지로 집단 이주시키는 독립가옥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집중 추진되었다. 이러한 화전민 이전정책은 1976년경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민통선을 중심으로 한 휴전선 일대의 출입통제와 군사시설 및 군사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구역을 명시한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민통선의 장벽화와 민북지역(CCZ)의 통제는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두 번째로 민간인통제구역의 북쪽 경계인 휴전선 일대의 장벽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역설적으로 이 과정은 민북지역에 대한 개발(농경지 개간)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식량증산을 위한 민북지역 개발의 요구를 안보의 관점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원래 민통선 이북 지역은 전후 오랜 기간 주민이 소개되어 농사나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개간과 수리시설 마련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뢰 위험과 군사적 갈등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 민북지역에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군사작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9)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산림녹화 - 화전정리사업’ 항목

(<http://theme.archives.go.kr/next/forest/project/burnField.do>) (검색일: 2020.3.1.)



때문에 민북지역 영농에 대한 군부의 기존 입장은 반대와 적극적 통제였다. 하지만 1967년경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영농이 군사작전상의 전략촌 개념으로 고려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시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의 급증 및 1966년 이스라엘 시찰을 통한 키부츠¹⁰⁾ 전략촌 개념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내무부는 1967년 1월 26일 ‘낙후개발지역(도서, 낙도) 개발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였고, 2월 1일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낙후지역(도서·낙도 및 접적·수복지구) 종합개발’ 계획으로 이어졌다. 전략촌 개념이 적용된 낙후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국토 내부의 근대화를 위한 같은 해의 ‘대국토 건설계획’과 짝을 이루는 군사안보 관점의 국토개발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도 승공능력을 갖추고 그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이며, “이 지방주민의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더 고차원적 승공통일의 방향으로”¹¹⁾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다시 말해 민북지역 개발의 경제적 필요성은 이미 대두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결정적인 계기에는 심화된 군사대립과 남북 경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군사적-안보적 위기의 인식전환이 있었다.

특히 1968년 청와대습격사건은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까지 방어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휴전선 일대의 방어선을 강화¹²⁾하고 첫 번째 전략촌인 대마리 재건촌 건설을 그 해 8월까지 조속하게 완수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휴전선의 기존 목적과 철조망을 철책으로 강화하고 감시초소를 촘촘히 건설하는 한편, 적 예상침투로 상에 있어

10) 키부츠(Kibbutz)는 1909년 시오니즘 운동 이래 건설된 이스라엘의 정책적 집단영농 자치 공동체로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모든 생산활동 및 생활재는 공동소유이고 수입은 공동체로 귀속된다. 아랍권과의 관계에서 향토방위라는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현대 키부츠의 상당수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삶의 양식을 버리고 사유화를 도입하였다.

1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498, 「낙후지역(도서, 낙도 및 접적, 수복지구) 종합개발 관계관 회의 결과보고」(내무부, 1967) 등.

12)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 과정과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Jung(2019)과 정근식(2018)을 참고할 것.

전략촌이 일종이 방어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간방위체제 구축을 기획하였다. 따라서 전략촌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은 모두 농민이어야 했지만, 동시에 군대의 경험이 있고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자체 방위능력을 갖춘 자들이어야 했다. 전략촌은 인구학적 압박이나 식량증산의 목적이 군사작전상의 필요성과 결합되면서 탄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1967년 육군사관학교 교수 임동원은 반공 전략으로서 “주민통제망으로서 ‘애국반의 강화’, 산간벽지에 분산되어 있는 농민들에 대한 ‘특수한 통제책 강구’, 대내 심리전 강화를 통한 ‘반공사상 고취와 승공태세 확립’ 등을 열거”(허은, 2015: 304-5)했다. 이처럼 전략촌은 내외부와 전후방을 분리하는 이중의 장벽의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전방의 공간구성 논리를 보여준다.

전략촌은 평소에는 농경에 힘써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한편, 적의 심리전이나 프로파간다에 흔들리지 않고 적의 침투위협으로부터 자체 및 지역방어를 할 수 있는 아군의 안정적인 거점이 되어야 했다. 그러한 구상이 드러나는 문건으로는 국방대학원에서 발표된 일련의 졸업논문들¹³⁾을 참고할 수 있다. 전략촌의 조성계획을 다루는 연구논문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국방대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전략촌의 연구가 시급한 과제이자 군사적 기밀로서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고광도(1967)은 “경제적 내지 군사적 합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이란 한국에 적합한 전략촌의 형성일 것”이라며, 농업생산의 가치와 군작전상의 가치라는 두 가지 큰 기여라는 측면에서 전략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영농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전략촌이 만들어진다면, “종래의 제약요인은 극복될 수 있는 동시에 오히려 군작전 및 보안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고광도, 1967: 194)이라는 것이다. 〈그림 2〉는 이 시기 안보의 관점에서 전략촌이 가지는 위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낸다. 전

13)	발간연도	제 목	저 자 (당시계급)
	1965	귀농선북방의 영농문제고찰	육군준장 김인경
	1967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	육군소장 고광도
	1968	간접침투 분쇄를 위한 전략촌 설립	육군소장 이창호
	1972	예비군관리: 내륙취약지구에 전략촌건설을 중심으로	육군대령 조익형

전원근 /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락촌의 건설은 휴전선 일대와 같은 경계지역의 장벽화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림 2〉 군사안보에 있어 전략촌의 기여요소 (고광도, 1967)

군사안보에 있어 전략촌의 기여요소	
첫째: 군전투원의 증가	
1) 유사시 사단전투임무의 수행	
2) 보충병의 역할	3) 노무자로서의 활용
둘째: 대간첩작전의 강화	
가. 부락자체경계와 책임지역경계를 실시함으로써 경계망이 확대된다	
1) 자체경계	2) 책임지역경계
나. 대간첩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군 사기의 양양	
- 전략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농촌근대화와 문화적 생활은 장병사기의 외적요인으로 작용	
넷째: 對敵선전의 효과	
- 사회적 경제적 우위성을 적에게 드러냄으로써 적선전의 기만성 폭로 및 대적선전 효과	
기타 군민간의 유대 강화 등	

한편 이들 논문의 구상은 전략촌이 북방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의 주요 지역에도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창호(1968)와 조익형(1972)의 논문은 당시 북한의 전략·전술적 변화를 검토하고, 전국의 간접 침투 위협 혹은 예상지역에 “對간첩침략전대책으로서의 전략촌”을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의 설명에서는 일련의 마을들이 전략지역, 즉 안보상 취약지역을 둘러싸 간첩이나 게릴라의 출입을 막는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어선으로서 전략촌이 필요한 지역은 전방뿐만이 아니라 간첩침투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산악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1980년대 초반 타지역 전략촌 건설 논의¹⁴⁾로도 이어졌지만 건설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¹⁵⁾

14) 동아일보, 1980.3.25. 「수복지구·해안선 등 취약지구 전략촌설치 촉구」.

II. 전시장: 이상촌으로서 통일촌 건설과 진열

국가의 관점에서 경계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는 ‘장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계 너머의 적과 내부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선별하여 전시할 수 있는 일종의 ‘전시장’이기도 했다. 전방 지역은 국가와 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외부의 개입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데 방해받을 것이 없었다. 유일한 방해요소는 이미 통제 하에 살고 있는 민북지역의 주민들의 돌발적인 행위뿐이었다.

민북지역의 개발은 전략촌의 건설로 이어졌지만, 1968년부터 먼저 건설되기 시작하였던 재건촌은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최적화된 마을은 아니었다. 비록 국가의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마을로 건설되어 선전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민북개발과 식량증산, 주민의 통제와 안보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략촌에 있어 심리전의 개념이 보다 공세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73년 철원과 파주 두 곳에 설립된 통일촌이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 예컨대 주변보다 다소 높은 언덕지역(백연리 통일촌)이나, 북한의 산악에서 잘 내려다보이는 곳(유곡리 통일촌)에 건설되었으며, 모든 주택은 북향으로 건설되었고 마을의 조경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계경관(포페스쿠, 2018: 44)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일촌은 기본적으로 전방에 진열하고픈 근대화되고 ‘잘사는’ 이상적인 한국사회의 축소판이었다. 그것은 외부로는 북한뿐만 아니라 DMZ를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향한 것이었으며, 안으로는 국민들을 향한 전시물이었다. 이처럼 통일촌은 경계가 선전물의 ‘진열장’(지상현 등, 2018)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3〉은 통일촌이 남한 국민들에게도 정권의 성과를 보여주는 과시적 선전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1972년 ‘수복 및 점적지구 종합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내무부는 국

15) 충북 괴산군에 대한 허은(2015)의 연구는 전방이 아닌 지역에도 일종의 전략촌이 만들어졌으며, ‘새마을’의 개념적 토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부와의 협의와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1973년 경기도 파주군 백연리와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에 2개의 통일촌을 건설하였다. 통일촌 건설은 당시 국토개발 정책 중 특수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취약지대책의 전술도로 건설, 낙도지역개발 등과 동시에 추진되었다.¹⁶⁾ 민통선 북쪽에는 이미 한국전쟁 이후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들이 있었으나, 재건촌과 통일촌은 국가가 계획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도 근대주의(high modernism; 스콧, 2010)적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의 한 사례(전상인 · 이종겸, 2017)이자, 냉전기 국가안보적 목적으로 아시아의 농촌지역에 만들어졌던 전략촌들, 즉 말레이시아의 신촌(chinese new village)이나 베트남 전략촌(strategic hamlet) 등과의 연속성을 가지는 냉전 · 분단체제가 만든 지정학적 산물이었다.



〈그림 3〉 통일촌 입주식 보도와 통일촌 건설 후 변화된 철원 모습 보도
(경향신문 1973.8.21.(좌); 1974.10.17.(우))

경기문화재단(2013: 220-221)의 보고서는 통일촌 건설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5월 24일 적십자 전방사무소를

16) 매일경제, 1973.1.22. 「박 대통령, 유신저해요인 제거」.

시찰하고 “재건촌의 미비점¹⁷⁾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백연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5월 이 지역을 순시하다 ‘전진 농장’(전방 군부대에서 직접 개간·운영하는 농장)에서 농사짓는 군인들을 보고 추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1사단 인근에서는 1972년부터 하사관들에 의해 군 영농이 실시되고 있었다. 통일촌 건설은 1972년 5월 대통령 지시, 11월 협의회 구성, 1973년 2월 입주대상자 확정, 3월 개발(개간) 착수, 8월 입주식까지 약 1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진행한 ‘통일촌 건설 중앙협의회’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국방, 농수산, 문교, 보사, 상공, 체신, 건설, 문공 등 8개 부처로 구성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전략촌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의 ‘시범 농촌’ 건설 지시는 재건촌보다 더 전략촌에 가까운 개념으로 정책적 촌락을 건설 하라는 주문에 다름 없었다.

1973년 3월에 마련된 개간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진흥공사는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파주군(현재 파주시)에 토지조사와 경지정리 및 개간을 진행하였다. 통일촌 입주식이 파주의 경우 8월 21일, 철원의 경우 8월 22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계획 수립과 개간 및 농지확보, 주택건설, 인프라 건설 등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모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을 실시한 결과였다. 이 작업에는 인근 군부대뿐만 아니라 미리 선발·소집된 입주민들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통일촌 건설은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나 주민의 삶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1년여 만에 계획과 건설까지 이루어진 사업으로 향후 토지분쟁과 주민간의 불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17) 자료수집의 한계로 ‘재건촌의 미비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지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건촌과 달리 보다 전방에 가까운 거리에서 적의 시선에 노출되도록 의도된 마을의 위치, 북향을 하고 있는 현대식 주택과 경관적 요소들, 제대군인의 비율과 공동경작 등의 차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4〉 철원 유곡리 통일촌 위성사진
(구글맵 위성사진; 검색일: 2020.3.1.)

통일촌의 건설과 입주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뉴스 보도에서 통일촌은 ‘민통선 북방의 유희지’의 개간과 개발의 선봉에 선, ‘기계화 영농’ 및 ‘협업영농’의 기틀을 갖춘 ‘시범새마을’로 설명되었다. 성대하게 계획된 입주식에는 내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¹⁸⁾

통일촌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된 국가적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남북한의 경쟁, 북방개발, 근대화된 농촌모델과 관련되어 있기에 박정희 정권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 1974년 국회내무위원회에서 강병규 위원이 내무부장관에게 파주 통일촌의 경지정리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면서 나온 다음의 이야기는 통일촌이 가지는 위상을 보여 준다.

강병규 위원: (중략) 다섯째는 통일촌 문제입니다. 통일촌, 거기에 80세대를 우리가 이주시켜 가지고서 소위 민통선 북방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해서 북한괴뢰의 평화인가 나발인가 하는 것보다도 월등한 소득증대로 월등한 농경업을 이룩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했다 말이에요. 더욱이 그 마을은 판문점으로 가는 옆에 있어요. 남북회담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통일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상촌을 민통선북방에 만들어서 북괴의

18) 강원도 농업정책과(1977), 「통일촌 입주행사 보고」.

그것을 능가해 보자는 것이 우리의 야심이었어! 그러나 통일촌이 금년 들어서 본위원회에게 하나의 문제로 탄원서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아마 내무부에도 들어와 있을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통일촌은 농산물의 소득증대 내수면개발 산림개발 축산장려 약초재배 승공교육까지를 고려했던 다목적사업이야! 이 사업을 위해서 액수를 내가 밝히지 않지만 적어도 몇 억의 돈을 내무부와 농수산부와 건설부가 합세를 해서 투입을 했다 이것입니다.

* 자료: 제90회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1974.11.18.) / 강조는 연구자

이전의 재건촌에 비해 파주와 철원의 통일촌은 전방의 전시물로서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 통일촌은 남방한계선에 가까운 북쪽 지역, 그리고 적의 가시선에 보다 잘 포착되는 위치에 건설되었다. 유곡리의 건물들은 격자형 구조로 시각적 통일성을 갖추고 남고북저(南高北低)로 배치(전상인·이종겸, 2017: 32)되었다. 두 마을 모두 인근 마을이나 재건촌에 비해 훨씬 현대화되고 잘 정비된 마을 형태를 갖추었다. 현대식 주택들은 북향으로 건설되었으며, 유곡리의 경우 ‘통일’이라는 글자모양으로 배치되었고, 백연리의 경우 조경이 잘 된 주 도로 양쪽으로 주택들이 배치되었다. 마을 운영 내규를 통해 마을의 외관과 조경의 유지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는 통일촌이 당시 북한과의 경관 경쟁 또는 심리전의 하나의 요소로서 구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일촌이 계획된 1970년대 초반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의 하나로 서 경관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한편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간과 전략촌 건설로 바뀌고 있는 철원의 풍경은 그 자체로 선전물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재의 DMZ 인근과 전방 경관의 기반이 되었다.

III. 캠프: 통일촌 입주민의 선별과 통제

Tesfahuney와 Dahlstedt(2008)는 아감벤으로부터 시작된 예외상태와 캠프(camp)에 대한 논의들¹⁹⁾과 사회과학의 이동성에 대한 논의들

19) 아감벤(2008: 45)은 “서양 정치의 근본적인 대당 범주는 동자-적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정치적 존재, 조예-비오스, 배제-포함이라는 범주쌍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현대 사회의



(mobility turn)을 통해 ‘캠프’를 근대의 공간조직의 주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 격상시킨다. 이는 Minca(2015)가 캠프를 하나의 근대적 제도이자 공간적 생명정치 기술, 그리고 배치의 장치(apparatus of dispositifs)로 개념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캠프, 즉 수용소는 전쟁 중의 집단수용소나 식민지 플랜테이션 수용소처럼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건과 결부되어 나타났던 시설을 넘어서 권력이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는 공간적 실천과 논리의 전형적 방식 중의 하나가 된다. 특히 Tesfahuney와 Dahlstedt(2008)는 캠프가 단지 인간들의 격리나 공간적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신체와 기호, 제도와 공간을 뒤섞어서 기존의 규범적 범주들을 허물고 권력의 목적에 맞는 배제와 포함의 질서를 창출해내는 실천임을 주장한다.²⁰⁾ 따라서 이들은 캠프의 양상에 단순히 배제되거나 박탈당한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게이트드 커뮤니티처럼 엘리트나 권력자들처럼 “선별된”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공간적 양식들도 포함시킨다.

캠프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전방이라는 물질적이고 상상적인 공간이 예외적인 공간으로서 작동해온 측면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볼 때 통일촌은 예외공간으로서의 전방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가 될 수 있다. 통일촌은 기본적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개간·영농이라는 경제적 필요와 휴전선 인근의 안보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칙군사적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민북지역 개발과 근대화된 농촌사회 건설을 현시함으로써 정권의 정치적 정당화에 기여했다. 통일촌은 인간의 이동성

수용소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수용소란 예외 상태가 규칙(nomos)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같은 책: 319)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외 상태를 둘러싼 권력의 작동이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Gregory(2006)의 국제관계와 식민주의라는 맥락을 통해 분석한 판타나모 수용소 사례나 Diana Martin(2015)의 팔레스타인의 수용소-도시의 중첩적 존재양상에 대한 분석 등으로 이어지면서 예외공간 또는 캠프(camp)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였다.

- 20) 이들은 캠프를 “영토, 비인간, 사건, 사람들, 관념들을 융합시키고 중층적이고 폐쇄적인 일련의 공간의 질서를 생산하는 포섭의 장치, 탈/재영토화의 기계”(Tesfahuney and Dahlstedt, 2008: 175)로 표현한다.

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내부완결적인 법적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여 권력의 특정한 목적 완수에 연결된 장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캠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옥수수와 같이 키가 커서 은폐가 가능한 식물은 재배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거나, 반입가능한 물건과 조경양식이 정해져 있거나, 지뢰가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등 비인간적 요소들도 질서구축의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거주지와 경작지의 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한 주민의 모집과 거주자격 상실 등 디스인센티브에 기반한 운영은 완전히 강압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율적이지도 않은 형태였다는 점에서 캠프의 또 다른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캠프는 강압을 사용하여 격리하는 방식 또는 자연적으로 구성된 지역 자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든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통일촌의 건설은 ‘선별’에 의한 것이었다. 통일촌의 주민모집은 그 질서 안에 포섭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위험(risk)들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통해 보상하여 유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국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의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볼 순 없었다. 더 나아가 국가는 이렇게 모집한 사람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하나의 캠프로서 통일촌은 입주자를 단순히 국민됨의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벗겨내고 월북이나 집단행동, 노름이나 주사, 규칙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만한 경력, 장애나 질환이 없어 심신이 ‘건강’하여 지속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체, 결혼을 하여 핵가족을 이룬 ‘안정적’인, 장손이 아닌 남자라는 몸들의 기준으로 재편했다. 이 기준은 당시 전방이란 곳이 생각보다 얼마나 일반국민에게 유리되어 성역화되어 있는 곳인지 보여준다.

당시 엘리트 군인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반 농민들과 저소득층은 전방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외딴 곳의 농민들과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에서 빈곤한 상태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안보위험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창호(1968)의 연구에서는 쉽게 돈벌기 위한 ‘알량한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고 농촌을 등지는’ 자들이 도시문제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간첩과 심리전 등 간접침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간접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국가주도로 농촌을 개발하고 조직하여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며 반공사상을 주입하고 방첩태세와 민방위태세를 갖추는 등 전략촌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광도(1967: 202-203)의 관점에서 농민들은 첫째로 “확고한 정신적 무장이 결여”되어 “각종 위반을 가볍게 여기며 북괴의 심리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로 이들이 “자체경계대책이나 방첩대책 등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군의 통제가 힘들고 군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였다. 따라서 전방에 갈 수 있는 자들은 특정한 자격을 만족해야만 하고, 이들의 재교육과 군의 통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예를 들어 화전민의 이주과정에서도 선발이 있었다. 양구군이 민통선 북부에 화전민 입주허가를 요청한 양구군에 대해 해당 관할부대는 “상기 입주 인원은 화전민 및 제대군인으로서 반공 사상이 견고하고 노동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화전민 이주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던 통일촌 입주자격 심사는 우리 몸에 새겨진 전방의 의미를 보여준다. 통일촌 전체 가구의 절반은 제대군인에게 할당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신체와 사상이 건강한 남성이며, 이성애규범적인 핵가족(5인 이하)의 젊은(45세 이하) 가장으로 채무와 범죄경력이 없는 자들로 채워졌다. 여성은 단지 그런 가장에게 소속된 노동력을 갖춘 가구원으로서만 전방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었다. 위험한 전방에서의 생활 중 혹여나 대가 끊길 수 있기에 장남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전상인 · 이종점, 2017: 32). 우리가 전방이나 통일촌에 입주한다고 가정해볼 때 이러한 기준들의 존재는 우리의 몸들이 입고 있던 국민주권이나 정체성 등이 벌거벗겨지는 동시에 다른 질서 속에서 권력의 목표에 맞추어 재구성된다는 캠프의 조직 원리를 보여준다.

1973년 초 통일촌 주민 선발 및 운영 등에 대한 내무부와 국방부의 합의 각서²¹⁾가 체결되었고, 이를 토대로 파주시와 철원군의 입주민 공고를 통해

21) 내무부 · 국방부(1973), 「統一村組織運營要綱에 關한 協議覺書」(철원군청 소장자료). 여기

입주민을 모집하였다. 파주는 80세대, 철원은 6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제대군인(장교 및 하사관) 세대로 구성되었다. 일반인들은 지역 연고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사상검증과 범죄경력, 군복무, 건강과 가족상황 등 다양한 선발기준이 적용되었으며, 군 출신은 제대 후 입주영농을 희망하는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들이었다. 비록 엄격한 선발기준이 있었지만, 당시 영농을 통한 기대수익과 입주민에 대한 주택 및 교육비 지원 등은 일반적인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다른 직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인센티브였다. 각 가구에는 철원 유곡리의 경우 논 3,300여 평, 밭 3,000여 평의 경작지, 파주 백연리의 경우 8,000여 평의 경작지와 함께 15평 정도의 현대식 주택이 제공되었으며,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이용이 힘들었던 전기와 전화, 경운기와 트랙터, 마을 버스도 지원되었다. 따라서 통일촌의 입주민 모집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다른 캠프들이 그러하듯, 통일촌에서는 거주자들의 정체성이나 경력이 지워지고 특정한 일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전에 누리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적 국민주권들이 박탈되는 한편, 총기 지급과 같은 초법적인 새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국가안보 위기론에 근거한 전방의 예외상태의 창출에 의한 것이었다. 통일촌 주민은 농업에만 종사하도록 지정되었으며, 경작활동과 기타 소득사업들은 모두 마을 공동으로 관리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 공동체와 비슷한 구조였다. 입주민의 절반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구성된 민간 군사방위조직으로, 마을 안에 무기고와 초소가 설치되었고 유사시 전선 방위를 맡을 수 있도록 군과 연계한 잦은 훈련이 이루어졌다.

철원 통일촌 주민들의 경험은 군의 통제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지원은 이러한 위협하고 고된 생활을 인내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까지 유곡리는 출입영농조차 허용되지 않는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으며 오성산의 북 관측소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에 따르면 통일촌 운영의 목표는 잘 살고 복스럽고 정다운 마을로서, “1)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향, 2) 자조, 근면, 협동, 자위하는 새마을”, “호당 경지면적 2ha 이상의 자위안정 농가”였다.

전원근 /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항상 군사적인 긴장감과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입주 초기에 밤이 되면 등화관제를 철저히 했고 마을사람들에게 칼빈총이 배당되어 있어 유사시를 대비해 수시로 훈련을 받았다”²²⁾고 한다. 또한 군인들과 경계근무를 서기도 했다. 주택 벽면은 총알이 관통할 수 없게 두겹게 만들어졌고, 집집마다 일련번호가 주어져 “유사시 각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잦은 군사훈련과 점호 및 등화관제에 참여해야만 했으며, 마을에는 무기고가 마련되어 세대별 총기가 비치되었다(전상인 · 이종겸, 2017: 32-33). 일상적 의복, 경작물의 종류, 조경과 같은 요소도 군사적 요소로서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군부의 규정²³⁾에 따라 남자는 규정된 모자 착용, 여자는 규정된 표식(마후라 등)을 부착해야 했다. 또한 음주는 관혼상제를 제외하고 금지하되, 농번기는 1인 1일 2잔(습)으로 제한되었다. 이처럼 주민들은 고도의 군 통제와 군사주의 문화 속에 적응해 살아야 했다. 통일촌은 결국 애초 목표했던 이스라엘의 정착촌(키부츠)보다는 장벽 안에서 통제와 감시 속에 살아가야 하는 팔레스타인 캠프(수용소)에 더 근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척과 초기 생활 동안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입주민들이 지뢰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략촌 입주민들의 농경지 개척과 입주 초기 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피해들은 아직도 제대로 수집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이러한 피해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폐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오히려 전략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후 지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 책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끔 했다.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지역에 정주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관리와 지원을 받는 거래의 형태는 민북지역의 전략촌 뿐만 아니라 1974년 이후 서해5도의 개발과정에서도 되풀이되었다(전원근, 2014).

캠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결코 권력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초

22) 철원문화원 · 강원도문화원연합회(2018), 『철원군과 김화군의 사라진 근현대사』, 247쪽.

23) 국가기록원 DA0443865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대한 의견 회시」에 군부의 통일촌 민사규정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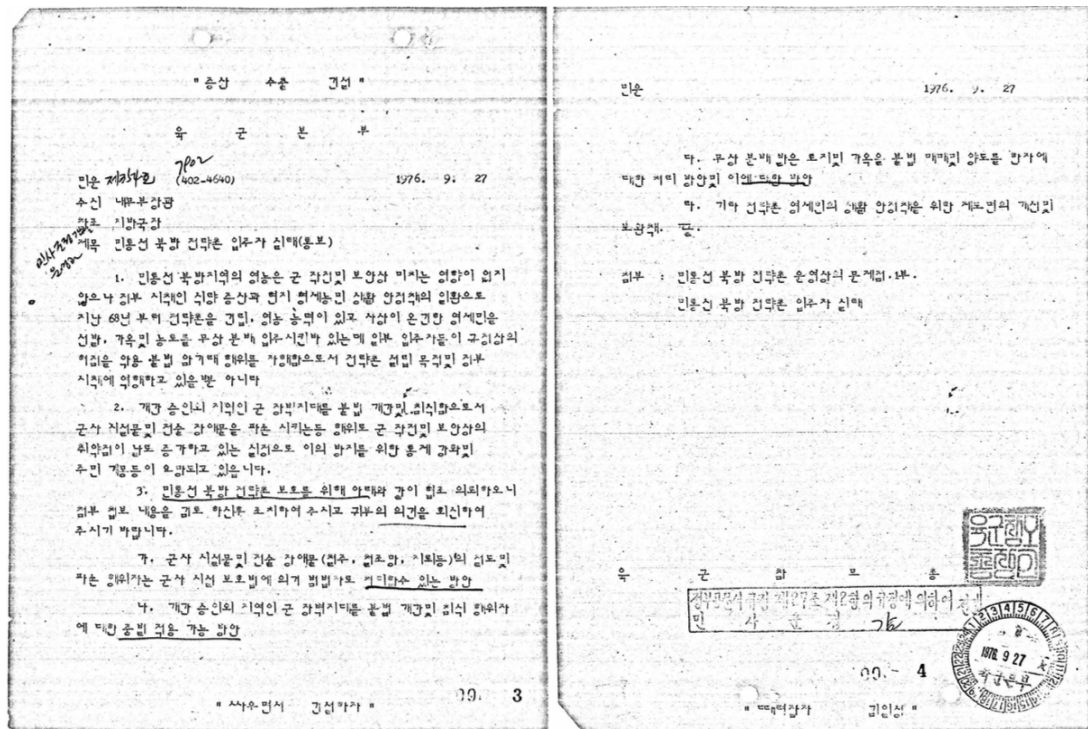
창기 입주자 ‘선별’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서의 틈을 이용하여 전복적인 상황들을 연출했다.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군과 정부기관은 주민들의 일상적 위반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첩보들을 보고하였다. 1976년 9월 군은 (재건촌 및 통일촌) 전략촌 주민들이 “규정상 허점을 악용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암거래한다든가 군장벽지대까지 불법 개간함으로써 군작전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첩보와 대책구상을 요구하였다.²⁴⁾ 〈그림 5〉는 통일촌의 입주자들이 정부와 군의 가이드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위가 상세히 관찰되고 보고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시설물 및 전술 장애물의 절도 및 파손행위, 허용된 지역 외의 불법개간 및 침식행위, 무상 분배받은 토지 및 가옥의 불법 매매 및 양도, 영세민의 생활 안정책 구상이 위반자의 실명과 함께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관한 의견 회시」에서 “이는 당부의 단독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 문제를 관련부처 관계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회시한다.

또한 내무부는 1977년 강원도지사 앞으로 「민통선 북방 전략촌 주민 부채에 관한 첩보」를 하달하고, 새마을 정신을 진작하고 지도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적자영농, 음주 및 도박행위로 인한 부채 증가로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 총 부채가 13세대 13백만원이며, 연간 영농적자가 2,600천원, 영농자금 2,800천원, 기타 부채 7,540천원으로 보고되었다. 이 내용은 1977년 5월 28일 관할 부대에서 상세하게 작성한 것으로 내무부에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된 흉작과 행정관서의 치안 및 행정력 소외로 인해 도박이 유행하여 개인 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²⁵⁾ 실제로 단순 농업 위주에 사채, 농협, 장기채 등 부채가 누적되어

24) 내무부(1976),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대한 의견 회시」(수신 육군참모총장) (국가기록원 DA0443865) 안에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전략촌 입주자 실태 첩보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당시 파악된 실태자료는 백연리는 78세대, 유곡리는 64세대로 입주당시와 달리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5) 내무부(1977), 「민통선 북방 전략촌 주민 부채에 관한 첩보」(국가기록원 DA0443865).

유곡리 통일촌의 생활고는 극심해져 갔다. 그 원인은 입주 후 3-4년간 이루어진 객토와 개간 등으로 영농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으며 농업용수와 토질 박토로 인한 작황 저조 및 고리사채 이용 등에 있었다.



〈그림 5〉 1976년 육군본부의 전략촌 주민문제에 대한 첩보 일부
(자료: 국가기록원 DA0443865)

이러한 문제들은 1977년 「통일촌 육성 세부 실천 계획」(국가기록원 DA0443865)의 작성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주민의 생활지도와 교통, 협동 등 세부 항목별로 대책이 강구되었다. 더 나아가 1978년 내무부와 국방부는 「통일촌 사후관리에 대한 각서」²⁶⁾를 체결한다.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첩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의 해결과 통일촌의 퇴거와 신규입주 등 새로운 변화와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입주자의 퇴촌 희망시 이를 허용하고 새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경작권의 가족내 승계에 대

26) 철원군(1978), 「통일촌 합의각서 조정 제출」(철원군청 소장자료)

한 사항, 대리경작자, 외부노동자 고용, 주택 및 공공시설 변경, 농한기 일 시퇴촌 및 외부노동, 출입증 발급의 간소화, 강제퇴거의 내용 등이 있었다. 또한 통일촌 사후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는 재건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건촌은 기존마을이며 군사적인 면보다는 행정적인 면의 비중이 크며, 통일촌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이 희박하여 주택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 별도의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통일촌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의 시초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전방의 자랑스러운 시범촌이라기보다 일종의 골칫거리가 되어갔다. 1975년 민통선 북방 개발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국가기록원 DA0443865)에 지적된 전략촌의 문제점들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구성의 이질성(출신지역 및 군출신과 농민출신 간의 이질성)으로 새마을운동이 어렵다는 점, 철원은 공무원이 공무로 방문하더라도 4개 출입증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고 통제가 심하다는 점, 부락자체 방위능력에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분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입주민 군출신자들의 영농기술미달, 군통제로 인한 영농지장 등이 있었다. 특히 토지소유권 문제의 확대는 경제건설 및 경관경쟁에서의 남한의 승리와 함께 1980년대 초반 국회에서의 전략촌 추가건설 논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략촌이 확장 건설되지 않은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도 지속해서 대통령에게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전략촌이 문젯거리로 보고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었다.

통일촌의 사례는 ‘전방’ 또한 하나의 거대한 캠프로서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캠프는 다양한 사건, 관념, 물질, 제도들을 뒤섞어 권력의 유지에 기여하는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장치이다. 그렇게 볼 때 전방이라는 이 질서 안에는 한국전쟁에서 연평도피격에 이르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미지들, 법률과 제도들이 융합되어 냉전적, 군사적, 폭력적인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진 다. 전방은 휴전선 인근의 경관과 같이 특정한 공간의 모습과 결부되어 상상되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기능은 특정 지역을 넘어 다양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전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는 표지판과 검문소, 탱크 진격을 막기 위한 구조물, 간첩신고 포스터와 국방색과 위장무늬 등에서 나타나며, 제도적으로는 ‘누가 전방에 갈 수 있는가’ 또는 ‘누가 전방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가’를 정의하는 징병제, 신체검사와 훈련소의 작동방식, 사상검증과 범죄경력 조회 등의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전방의 선별기능들은 누가 전방에 갈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남성-비장애-건강한-젊은 몸과 그렇지 못하는 몸을 나누는 경계로서 우리 ‘몸’ 위에 새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전방에서의 근무 경력은 ‘고생을 뼈빠지게’ 했던 경험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자랑스러운 조건을 갖춘 신체와 남성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4. 탈냉전 과제로서 전방의 해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주변부 지역의 재영토화 작업들은 국토개발과 냉전 지정학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경관적 이미지와 의미망으로 경험하는 안보-경제 연계체로서 ‘전방’의 구성에 기여했다. 전방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현실을 조직화하고 구체화하는 담론이자 장소로서 작동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전방에 갈 수 있는 신체(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성)와 그렇지 못한 신체로 나뉘어 왔으며, 전방/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왔다. 또한 전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간첩신고 포스터나 전쟁기념물, 교과서와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사전에 막는 일종의 경계이다. 북한의 인터넷 주소에 우리가 접속하지 못하는 막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프로그램도 이미 가상공간에서 전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방은 우리 몸과 의식에, 문화와 제도에, 그리고 전국 곳곳과 가상공간에도 가로

새겨져 있다. 포페스쿠는 이러한 경계의 편재성을 ‘네트워크화된 경계(networked border)’로 개념화한다. 네트워크화된 경계란 경계가 영토의 특정한 변방뿐만 아니라 제도와 우리의 신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소들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alibar, 2002; 포페스쿠, 2018). 이런 점에서 보면, 전방은 단지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구역이나 ‘DMZ 일원’이라는 특정공간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서 한국사회 도처에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주장일 것이다. 경계를 이렇게 다층적인 차원을 통해 살펴본다면, 긴 시간 동안 ‘전방’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과 전후 형성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민간인통제선, 수복지구, 군사시설보호지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군사적·행정적 경계들은 전방의 복잡성을 극대화시켰다. ‘전방’은 이 복잡함을 하나의 단어로 응축하는 한편 경험과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국제적 탈냉전화가 진행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전방의 존재와 긴밀하게 엮인 안보담론들은 지금도 강력한 구심점이 된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전방 방문은 가장 흔한 예가 될 것이다. 전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국민국가 경계형성의 문제로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전방’이라는 감각이 그것을 탄생시킨 냉전지정학²⁷⁾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안보²⁸⁾를 주어진 객관적

27) Agnew(2003: 103)는 기존의 지정학을 그것의 구성적 성격과 권력관계 및 수행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문명적 지정학(civilizational geopolitics), 자연화된 지정학(naturalized geopolitics),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지정학(ideological geopolitics)으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의 하나로 냉전 지정학은 세계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안전한(friendly) 지역과 위협적인 지역이라는 공간구분을 통한 세계의 균질화, ‘봉쇄(containment)’나 ‘도미노 효과’, ‘헤게모니적 안정성’이라는 주요 관념들을 통한 이데올로기 갈등의 자연화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대의 지정학적 상상들은 세계를 시각화하고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수단이자 체계로 작동하며 유럽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신생 국가들의 질서와 체계 안에 편입되며 일종의 공통감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28) 안보(security)가 지식권력과 담론, 통치의 방식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점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정책 비판으로부터 1990년대 등장한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 페미니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영역에서



현실로 지속적으로 자연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고루한 냉전지정학적 담론에서 벗어나 공간의 구획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앞으로 경계에 대한 더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통일촌은 전방의 일부 공간에 조성된 조용한 마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 포개져 있는 전방의 존재양상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전방을 이루는 요소들을 섬세하게 분석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어떠한 원리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전방은 세계와 우리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이며, 그러한 점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2013), 「통일촌브랜드마을육성사업: 통일촌 마을조사보고서」.
고광도(1967),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학위논문.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889432, 「경기도 연천군 경지정리조사서」 등.
_____ DA0443855,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에 대한 의견 회시」 등.
_____ DA0443865, 「통일촌 육성 세부 실천 계획」 등.
_____ BA0084498, 「낙후지역(도서, 낙도 및 접적, 수복지구) 종합개발 관계관 회의 결과보고(내무부. 1967)」 등.
_____ BA0933712 「경지정리사업(철원군, 1973)」 등.
국회기록보존소(1966), 「국방위원회 제57회 14차 회의록(1966.7.16.)」.
_____ (1974), 「제90회 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1974.11.18.)」.
김인경(1965), 「귀농선북방의 영농문제고찰」, 국방대학원 학위논문.
김동완(2013), 「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_____ 국제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구성을 문화분석이나 젠더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석하고 있다(Gentry C.E. 등, 2019).

- 『공간과사회』 23(2), 129-162쪽.
-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 1A00614174959568, 「화전민 대책보고」.
- 문화공보부(1971), 「70년대 조국의 미래상」, 『지방행정』 20.
- 박명규(2012),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 박배균·백일순(2019),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박배균·이승욱·지상현 편(2019),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한울, 40-91쪽.
- 박배균·이승욱·지상현 편(2019),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한울.
- 박영철·김영봉(1997), 「한국의 접경지역 관리방안(하)」, 『국토』 183, 61-73쪽.
- 슈뢰르, 마르쿠스(2010[2006]),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 스콧, 제임스 C.(2018[1998]),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 신윙희(2005),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2), 253-285쪽.
- 아감벤, 조르조(2008),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 이창호(1968), 「간첩침투 분쇄를 위한 전략촌 설립」, 국방대학원 학위논문.
- 장세훈(2017),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알트.
- 전상인·이종겸(2017),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2(4), 27-41쪽.
- 전원근(2014), 「동아시아 최전방 낙도에서의 냉전경관 형성: 1970년대 서해5도의 요새화와 개발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4, 77-106쪽.
- _____(2019a), 「1970년대 국토경관의 사회적 구성: 개발과 안보의 재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9b), 「1970년대 국가 프로젝트로서 ‘땅굴’과 전방의 냉전경관화」, 『문화와 사회』 27(2), 7-51쪽.



- 정근식(2016),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 사상과 연대」, 『아시아리뷰』 5(2), 211-232쪽.
- _____(2018), 「냉전 · 분단 경관과 평화: 군사분계선 표지판과 철책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100, 153-182쪽.
- 정근식 · 김민환(2016),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진인진.
- 정종현(2009),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 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9, 423-460쪽.
- 조익형(1972), 「예비군관리: 내륙취약지구에 전략촌건설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학위논문.
- 지상현 · 이진수 · 조현진 · 류제원 · 장한별(2018), 「냉전의 진열과 쇼팽: DMZ 전망대를 통해 살펴본 냉전경관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53(5), 605-623쪽.
- 철원군 농업정책과 문서철(1977-1978), 「내무부, 국방부(1973) 통일촌 조직운영요강에 관한 협의각서」, 철원군청 소장자료.
- 철원문화원 · 강원도문화원연합회(2018), 『철원군과 김화군의 사라진 근현대사』, 철원문화원.
- 포페스쿠(2018[2011]), 이영민 · 이용균 외 옮김, 『국가 · 경계 · 질서(Bordering and Ordering the Twenty-first Century)』, 푸른길.
- 한모니까(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 허은(2015),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박정희정부의 ‘대공새마을’ 건설」, 『역사비평』 111, 293-326쪽.
- Balibar, Étienne(2002), *Politics and the Other Scene*, London: Verso.
- Elden, Stuart(2013), *The Birth of Terri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ntry, C. E., Shepherd, L. J., and Sjoberg, L.(2019), “Editor’s Introduction”, in Gentry, C. E., Shepherd, L. J., and Sjoberg, L.(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Security*, Routledge, pp.1-12.
- Gregory, Derek(2006), “The Black Flag: Guantanamo Bay and the Space of Exception”,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88(4), pp.405-427.

- Jung, Keun-Sik(2019), “The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Cold War Landscap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ts Peaceful Use”,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3), pp.287-319.
- Martin, Diana(2015), “From spaces of exception to ‘campscape’: Palestinian refugee camps and informal settlements in Beirut”, *Political Geography* 44, pp.9-18.
- Minca, Claudio(2015), “Geographies of the camp”, *Political Geography* 49, pp.74-83.
- Simmel, Georg(1992),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Gesamtausgabe Bd. 11*, Hg. von Otthein Rammstedt, Frankfurt/M.
- Tesfahuney, M. and M. Dahlstedt(2008), “Maze of Camps: (Im)mobilities, Racism and Space of Exception” in Maria Holmgren Troy and Elisabeth Wennö eds.(2008), *Space, Haunting, Discours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Walls, Halls, and Camps: The (De)Construction of 'Fronts' and *Tongil-chon* in Cold War Korea

Chun, Wonke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IAW)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ongil-chon* (unification villages) and the use of *jeonbang* (the front) as a spatial concept from the late-1960 to early 1970s in the South Korea. While food shortages following the Korean War necessitated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areas of Civilian Control Line (CCL), this development conflicted with existing security fram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und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spatial logics in the form of created *jeonryak-chon* or strategic hamlets. Through the militariz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area, the *jeonbang* became a double barrier that served as a wall divid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a wall divides between the dangerous front and the secure rear within its territory. Second, the *jeonbang* served as an exhibition hall for propaganda towards not only the outside world but also within. The *tongil-chon* or unification village, for instance, served as a political construct of a utopian society that South Korea used to foment political power amongst their people. Third, the unification villages show the logic of camp and space of exception which the *jeonbang* has embodied for last 40 years. The government strictly distinguished those who can be inhabitants from those cannot, arranging and establishing new spatial order. The inhabitants, under military control, could not assert their basic rights. These layers of the front are still working in South Korea, limiting popular imagination of territory, security, and border within old Cold War frames. This analysis de-constructs

the current logic and discourse on *jeonbang* in Korean society and asserts that re-imagining this spatial logic can present new possibilities between the two Koreas.

Key Words

front, division border, security-economy nexus, wall, exhibition hall, camp

투 고 일 : 2020. 2. 17.

심 사 일 : 2020. 3. 15.

게재확정일 : 2020. 3. 16.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

State Village Campaign in DMZ - A Case Study of 'Tongil-chon', Cheorwon -

전상인** · 이종겸***

Jun, Sang-In · Lee, Jong-Kyum

Abstract

State village campaign appea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as a result of so-called 'High Modernism'. The campaign took place in DMZ in South Korea as well in 1973, and its most representative case is 'Tongil-chon' in Cheorwon. This village campaign was also closely relat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It was constructed with strict resident selection process and extraordinary economic incentive provision for the political propaganda vis-a-vis North Korea an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land use in DMZ. However, Tongil-chon decayed as time goes by because of its failures in community building and land ownership disputes. The social conflicts in Tongil-chon particularly imply the importance of land ownership distribu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키워드 ■ DMZ, 국가촌락, 통일촌, 마을만들기, 토지소유권 분쟁, 통일

Keywords ■ DMZ, State Village, 'Tongil-chon', Village Making, Land Ownership Dispute, Unificatio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민간 인출입통제구역은 6.25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유산이다.¹⁾ 이곳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도 마을이 있다. 민간인들이 상주하는 가운데 외부 사람들이 제한적이거나 출입하기도 한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통상 '민북(民北)마을'이라 부른다.

최초의 민북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허술한 출입제한을 틈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휴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가 '마을 만들기'를 의도적으로 진행한 곳도 있다. 전자의 사례가 '자립안정촌'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재건촌'과 '통일촌'이 대표적이다. 재건촌과 통일촌은 전형적인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의 결과다.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건설된 국가촌락은 국제법적으로는 전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국지적으로만 가끔 발생하는 안보상 여건변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농토를 경작하려는 욕구를 가졌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지역 민간방위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여기에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4일에 개최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움 "철원을 통하여 통일을 생각하다"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onggyom@gmail.com)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목적도 가미되었다.

DMZ 국가촌락 사업은 무인촌(無人村)에 사회공동체가 새로 형성되는 실험적 과정을 보여준다(전상인, 1997:149). 특히 강원도 철원군 유곡리 소재 통일촌은 한편으로는 대북선전과 체제홍보라고 하는 분단 상황 하 한국적 특수성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행정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국가촌락 캠페인의 세계적 보편성을 보여 준다(유곡리 통일촌 위치는 그림 1 참고).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촌락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유곡리 통일촌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기술한다. 이는 철원군 통일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자 학술적 연구이다.²⁾ 둘째, 세계 각국의 유사 사례들에 대한 예비고찰을 통해 국가촌락 사업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공공계획학적 의미를 성찰한다. 셋째, 통일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분단관리 및 향후 통일정책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그림 1. DMZ 민북마을 및 유곡리의 위치
Fig. 1.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and the Location of Yugok-Ri
Source: Green Korea Organization, 2008:42.

본 연구의 방법론은 테다 스카치폴(1990:460-462)이 말하는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적 역사사회학’(analytic historical sociology)이다. 비교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촌락 사업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촌 단일사례에 대한 분석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의 제한된 일반화를 모색하려는 연구전략이다. 그런 만큼 이 연구는 DMZ 국가촌락 연구에 있어서 작은 출발 혹은 마중물에 해당한다.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설문조사, 면접조사, 답사)와 문헌연구로 구성된다. 2015년 7월 24일, 8월 10~1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상 인구 118명 중 설문 49명, 면접 17명을 직접 면담하였다. 이 수치는 마을의 실제 거주민(65명 내외)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³⁾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고도 근대주의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태동한 DMZ 국가촌락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 공공계획학적 의미와 한국적 차원에서 통일 및 분단 정책에 관한 함의를 성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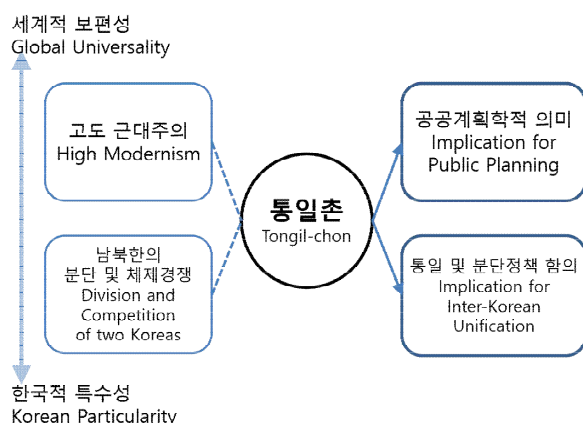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촌에 관한 분석틀
Fig. 2. Analytical Framework for Tongil-chon

II. 국가촌락 사업의 개념과 사례

1. 국가촌락 사업의 개념

촌락 혹은 마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국가촌락 사업을 “국가가 입지를 결정하고, 거주민의 모집, 선별 혹은 동원뿐 아니라 공간구조나 주거양식, 일상생활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거 계획 및 실행”으로 정의한다. 전형적인 국가촌락 사업은 20세기 ‘고도 근대주의’(high modernism)의 산물이다(스콧, 2010:24-25). 하이 모더니즘은 이른바 ‘국가처럼 보기’(seeing like a state) 방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사회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말한다.

2. 국가촌락 사업의 주요 사례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국가촌락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에티오피아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거대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에티오피아는 그것의 간판 사업으로 1985년부터 대대적인 국가촌락 건설에 나섰다(스콧, 2010:374-381). 그 목적은 다양한 언어권의 주민들과 분파성이 강한 지역들을 단일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460만 명의 농민이 4,500개 국가촌락에 새로 정착했다.

국가촌락들의 공간은 일제히 직선 형태로 구조화되었고, 모든 주택은 양철지붕으로 덮인 정사각형의 님은꼴로 건설된 다음 일련번호를 부여받았다(그림 3 참고). 직선형 공간구조와 획일적 주택형태는 반체제 활동과 폭동 방지, 주민 감시와 곡물 통제, 군

사적 동원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그러나 흥작과 기아, 그리고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인위적으로 건설된 촌락에 강제 이주된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험적 지식과 작물 경작에 적합한 전통적 토착기술을 미처 알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정착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박탈당한 상태였다. 말하자면 재정착 과정이 대규모와 초고속으로 진행된 만큼 장소적·사회적 맥락들은 크게 무시되었다.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약 20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었다(스콧, 2010:337-371). 농촌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농업의 국가공동 사업화를 통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앞섰다. 탄자니아에서 국가촌락 사업은 “국민교육, 부지 검색, 위치 조사, 촌락계획과 토지분할, 관리자 훈련 및 재정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스콧, 2010:354). 탄자니아의 경우 특히 미학적 질서가 강조되었다. 각각의 농촌마을에는 ‘보기 좋게’ 한 가지 종류의 환금 작물만 재배되었으며 농지와 주택, 도로 등 모든 공간이 규격화되고 표준화되었다. 또한 건본 촌락과 전시용 농장이 대량 건설되었다.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거둔 부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강제적인 촌락화와 집단 농업 도입의 실패, 관료제적 폐해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국가촌락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고 1980년대 중반 최고지도자 니에레레(Nyerere)가 사퇴하면서 탄자니아의 국가촌락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남베트남에는 이른바 전략촌이 등장했다. 이는 1961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미국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국가촌락이 군사용으로



그림 3. 에티오피아 재정착 마을 전경
Fig. 3. A State Village in Ethiopia
Source: Scott, 2010:379.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베트남의 전략촌은 농민들을 강제 소개(疏開)하여 공산계급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곳 주민들을 일련 번호가 매겨진 주택에 거주해야만 했고 출입이 엄격히 감시되었다(스콧, 2010:290). 베트남의 전략촌은 포로수용소와 유사했다. 전략촌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가혹한 통제는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곧 베트콩의 작전 거점으로 역이용되었다.⁴⁾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농장과 같은 촌락형태인데(그림 4 참고),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 곧 시오니즘에서 비롯되어 190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키부츠는 토지의 공동소유와 모든 경제·사회조직의 집단적 관리를 지향하는 농촌 취락형태에서 출발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며 모든 수입은 키부츠에 귀속되었다. 의식주가 공동계획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교육도 그곳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키부츠는 민간 군사방위체계의 일환이었다.

키부츠는 70년 이상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공간적 정착성 증대 및 이스라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적잖이 기여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키부츠는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개방, 키부츠



그림 4. 이스라엘 키부츠의 전경
Fig. 4. Kibbutz in Israel
Source: Yann Arthus-Bertrand's Web site
<http://yannarthusbertrand2.org>

의 경쟁력 약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핵심 배경이었다. 그 결과 많은 키부츠에서 협동의 원칙이 무너졌고, 공유재산과 무료급식 및 공동육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III. DMZ 국가촌락 사업의 경과

DMZ 지역에 최초로 등장한 촌락은 판문점 인근의 대성동 마을이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판문점 주변에는 일찍부터 교전이 억제되는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DMZ 남측의 대성동, DMZ 북측의 기정동 마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 외지에 나갔던 원주민들이 DMZ 지역에 귀향하여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민북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휴전선 이남 수복지역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행정관할권을 갖고 있던 UN군은 1954년 ‘귀농선’을 설정하고 그들의 영농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남북대치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영농 허가지역은 점차 확대되었고, 이들 지역은 자립안정촌으로 공식화되었다(박영철·김영봉, 1997:66). 초기의 대성동 마을이나 자립안정촌은 전형적인 국가촌락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1964년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촌락 건설을 추진할 여건이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68년부터 등장한 것이 ‘재건촌’ 12개 마을이다. 재건촌은 출입영농에 따른 거주민 보호의 취약성, 촌락의 자연적 형성에 따른 경계의 불명확성 등 기존 자립안정촌의 단점을 보완했지만, 체계적 준비 및 계획의 부족에 따라 협소한 주거공간, 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박영철·김영봉, 1997:67).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북선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에 건설된 것이 바로 통일촌이다.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남북한의 체제경쟁이 가열되었는데,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DMZ 국가촌락의 선전 역할이 부각되어 통일촌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촌은 철원군 유곡리와 파주군(현재 파주시) 백연리 두 곳에 만들어졌다.

DMZ 지역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2013년 현재 자립안정촌과 재건촌은 절반 이상이 지정 해제된 상태다(표 1 참고). 한편 1998년 건설된 해마루촌이 실향민 재정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다. 재건촌 이후 DMZ 국가촌락의 대표 사례로서 명실상부하게 대북선전 임무를 수행

한 것이 통일촌이라고 할 수 있다.

IV. 유곡리 통일촌의 태동과 성장, 쇠퇴

1. 태동

1973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촌 건설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키브츠를 모델로 하여 통일촌이 건설되었다(경기문화재단, 2013:21-22; 강원도민일보, 2006.10.17.). 민간 방위체제의 구축, 유희 경지의 효율적 이용, 대북선전의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고 만들어진 유곡리 통일촌은 1973년 7월 30일에 입주식을 열었다.

유곡리 통일촌 입주식은 주요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 장관이 축사를 할 정도였다.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의 관심 속에 태동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한 주민(P)은 입주식 장면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여기 입주식, 그 당시에 기가 막히게 크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이 김현옥씨야. 그리고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이렇게 와서 했거든. 그 내무부장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여기서 살다가 논두렁 밭두렁 비고 죽으시오” 이랬단 말야.

유곡리 통일촌은 입주 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후한 편이었지만 주민선발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가구당 경작지는 논 3,300여 평, 밭 3,000여 평 정도였고, 약 15평의 양호한 근대식 주택이 제공되었다. 촌락 건설 사업비로 가구 당 약 460만원이 투입되었다(철원군, 1995). 정부는 통일촌에 당시 철원 읍내에서도 없던 전기시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기 제공(2 가구당 1대), 부림소 공급, 전화 가설 등의 특전도 제공했다.⁵⁾

표 1. DMZ 지역 민북마을 현황
Table. 1. Villages in DMZ region

사례 Case		건설년도 Construction Period (Year)	건설된 촌락 수 Constructed Units	현재 촌락 수 (2013 년) Current Units: 2013
대성동 마을 Daesung-dong Village		1953	1	1
자립안정촌 Self-reliance Village		1954-1986	107	45
국가촌락 State Village	재건촌 Jaegon-chon	1968-1973	12	5
	통일촌 Tongil-chon	1973	2	2
해마루촌 Haemaru-chon		1998	1	1

Source: Kim and Lee, 2013: 136-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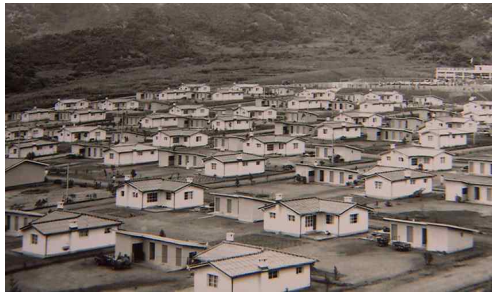


그림 5. 유곡리 전경(1973년)
Fig. 5. Yugok-Ri circa 1973

Source: Gimhwa-Up, 2009.



그림 7. 통일촌 주택 평면도

Fig. 7. Floor Plan of Tongil-chon Village

Source: 'DMZ GLocal Fair' Presentation of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8.14.

입주 지원은 6: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주민 P의 증언). 군인과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입주민 심사위원회는 세대주의 연령은 45세 이하로, 가족 수는 5인 이하로 각각 제한하였으며, 특히 세대주가 장손일 경우 입주를 불허했다. 부부 모두 일정한 노동력을 갖추어야 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때로는 건강진단서가 요구되기도 했다.⁶⁾ 그 결과 총 60세대가 선발되었는데, 철원지역 출신과 기타 지역 출신 입주민의 비율을 반반으로 해 균형을 맞추었다.

하지만 주택,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입주식 후 1년여 동안 남성 세대주들만 먼저 통일촌에 들어와 합숙생활을 하며 농지를 개간하고 안보수칙 및 생활규율 교육을 받았다(주민 E의 증언).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후 나머지 가족들도 한 달 동안 유사한 교육을 받고 마을에 들어와 결국



그림 6. 유곡리 위성사진(2015년 7월)
Fig. 6. The Satellite Picture of Yugok-Ri in July, 2015

Source: Google-earth, accessed 2015.07.02.



그림 8. 호수가 기입된 주택 현판

Fig. 8. Yugok-Ri Household's Numbered Signboard

Source: Taken in August, 2015.

입주식 후 1년이 넘어서야 입주가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59세대 231명이 최초의 통일촌 주민이 되었다(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 1992:559).

통일촌은 내부구조와 외부형태가 동일한 주택들을 격자형 구조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통일성을 꾀하였다(그림 5, 6, 7 참고).⁷⁾ 유곡리 마을은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지형을 갖고 있어 대북한 선전용으로도 유리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통일촌의 주거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튼튼한 편이라, 초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한다.

주택의 벽면 두께는 총알이 관통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웠으며 초가지붕인 아닌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였다.⁸⁾ 북동쪽 최단에 위치한 주택에서 시작하여(1호) 남서쪽 최단의 주택까지(60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그림 8 참고) 유사시 각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림 9. 통일촌 무기고 건물
Fig. 9. Weapon Store in Tongil-chon

Source: Taken in August, 2015.

유곡리 통일촌에서 주민들은 병영 내 군인 같은 생활을 했다. 무엇보다 유곡리 마을은 자체 예비군 중대로 조직되었다. 마을 무기고(그림 9 참고)에는 각 세대별로 총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매일 저녁 인근 부대로부터 점호를 받았으며, 야간 등화관제가 실시되었다.⁹⁾ 또한 예비군훈련 시 각 세대별로 배정된 비상진지에 투입되어 방어훈련 임무를 수행했다.

유곡리 통일촌의 일상생활은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다. 입주 초기 주민들은 야외 활동 시 적색의 조끼와 모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했다. 통일촌 주민이라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남파 공비의 잠입 우려 때문에 옥수수 같은 키 큰 작물의 재배도 금지되었고 각 주택의 마당에 잔디를 깔았다. 또한 도처에 지뢰폭발의 위험성이 깔려있기도 했다. 주민들의 외지 병원 나들이나 자녀들의 학교 통학에서도 검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외지에 사는 입주민의 가족들조차 마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다(주민 A, O의 증언).

이와 같은 애로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입주 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열심히 개척하였다. 이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정부가 과격적으로 제공한 넓은 농지와 양호한 주택 등이었다. 주민들은 정부 및 군 당국의 지원하에 지뢰가 남아 있는 황무지를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꾸어 촌락



그림 10. 통일촌 기념비
Fig. 10. Tongil-chon Monument

Source: Taken in July, 2015.

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러한 자부심은 통일촌 기념비(그림 10 참고)에 새겨졌다.¹⁰⁾

2. 성장과 갈등

한동안 유곡리 통일촌은 성공적인 국가촌락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였다. 1979년 정부는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유곡리 등 9개 민북마을에 약 34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 및 주택 개량, 농지 정리 등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2-4월 동안 철원군은 5개 마을에 약 3억원을 지원했는데, 유곡리 통일촌에는 약 2,500만원이 지원되었다. 여기에 주민 부담금 약 470만원이 합쳐져 주택 보수 및 개량(183건), 목욕탕과 농산물 공판장, 공동우물(4개소) 신축 등 총 201건의 마을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김영규, 2013:410-415). 입주식 이후 4년 만에 주거 및 생활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입주 초기에 조직화된 집단농업 방식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철원군은 민통선 내 개간 농지 30만평에서 콩 800가마를 수확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곡리는 입주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¹¹⁾ 농지 개간 및 영농과정에서 군부대의 대민지원도 활발했고, 군인들과 주민들의 화합도 좋은 편이었다. 1973



년 당시 유곡리 인구는 231명이었으나 1975년 302명, 1980년 342명으로 증가했다(표 2 참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갈등의 원인으로 세대주의 직업군인 출신 여부가 중요했다. 입주 초기부터 이장과 같은 마을 리더십을 직업군인 출신 주민들이 주로 맡게 됨으로써 일반 사병 출신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강원도민일보, 2006.10.17.). 직업군인 출신 여부는 학력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체로 직업군인 출신 부부가 사병출신 부부보다 학력이 높았는데, 사병출신 입주민을 도와 주려는 직업군인 출신 입주민의 선의가 ‘배운 척, 아는 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¹²⁾

여기에 출신 고향에 따른 지역 갈등이 은밀히 작동했다. 통일촌은 입주 당시부터 인구구성이 인근 철원지역의 주민 50%, 타 지역의 주민 50%로 구성되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온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곡리 통일촌에는 두레나 회식, 원거리 단체여행 등 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학교 소풍은 곧 동네 소풍이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에 직면했던 공통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는 마을의 공동체 정신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민통선 지역 마을에는 군사문화와 민간문화가 서로 뒤섞여 갈등의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전상인, 1997:148-149). 하지만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에는 여기에 몇 가지 특성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유곡리 통일촌은 DMZ 지역이라고 하는 엄격한 지리적 고립상태에 놓여 있었다. 섬처럼 격리된 공간환경 속에서는 사소한 차이나 갈등조차 크게 부각되기 쉬운 법이다. 둘째, 입주자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협력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심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거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고자 하는 개인적 성취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¹³⁾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

표 2. 유곡리 인구 추이

Table. 2. Population trends in Yugok-Ri

Year Data Area	1973 ¹⁾	1975 ²⁾	1980 ²⁾	1984 ²⁾	1989 ²⁾	1994 ²⁾	1999 ²⁾	
Household	59	63	66	60	59	57	61	
Population	231	302	342	297	231	197	183	
Year Data Area	2001 ³⁾	2004 ²⁾	2005 ³⁾	2006 ³⁾	2007 ³⁾	2008 ³⁾	2010 ²⁾	2013 ²⁾
Household	59	60	59	58	58	59	62	56
Population	174	170	154	149	139	141	135	118

Source: 1) Committee for Republishing the Chronicle of Cheorwon-Gun, 1992; 2) Cheorwon-Gun, 1976-2015; 3) Gimhwa-up, 2009.

표 3. 유곡리 연령대별 인구(2013년)

Table. 3. Population Statistics by ages in Yugok-Ri, 2013

Age Data Area	under 6	7~19	20~29	30~39	40~49	50~64	over 65	Total
Population	3	5	3	11	12	24	60	118
%	2.5	4.2	2.5	9.3	10.1	20.3	50.8	100.0

Source: Cheorwon-Gun, internal data.

해 우연히 모였을 뿐, 공동체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기반은 애초부터 약했던 것이다.

3. 쇠퇴

내부적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유곡리 통일촌은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강력한 외부 충격에 접한다. 접경지역의 수복지역에 본래 토지 소유자의 등기를 허용하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외지인의 원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로서, 유곡리에 새로 정착한 주민들에게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토지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융자해주는 방안을 취했으나 자금 부족과 일부 원소유자들의 매매 거부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

국가전략 입주주민들은 토지 원소유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도 대부분 패소했다. DMZ 지역의 토지 분쟁에 관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은 강원도 양구군을 사례로 하여 나왔는데 “민통선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김인영·김재한, 1999:408).¹⁴⁾

토지 소유권 분쟁은 통일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다. 원 토지소유권자가 나타났을 때 가난한 주민들이 자신의 경작지를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대신 주민들은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기도 했고, 그것조차 불가능할 경우 임대 경작을 하거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곡리 현지 주민들의 토지 소유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고, 2015년 7월 현재에 이르러 28.6%에 불과하게 되었

다(김화읍 내부자료). 토지분쟁은 1980년 이후 마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표 2 참고).

본 연구자들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토지분쟁의 발생 자체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하였다.¹⁵⁾ 입주 당시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농업이 생업인 만큼 농지 소유 여부는 사실상 사활이 걸린 문제다.¹⁶⁾ 토지 소유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진 것이다.

토지분쟁은 주민들 사이의 내부 갈등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을 기반으로 주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¹⁷⁾ 경우에 따라 같은 주민 사이에 고용-피고용의 관계도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입주 초기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크게 훼손시켰다.¹⁸⁾

설상가상으로 유곡리 통일촌은 기반시설의 낙후 및 노후화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늘어났다. 연구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점으로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재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¹⁹⁾ 굳이 그들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1970년대에 지어진 유곡리 통일촌은 외견상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 농촌에 비교하여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 여건의 낙후가 젊은 층의 외부이주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²⁰⁾ 유일한 학교였던 유곡초등학교는 학생 숫자 부족으로 1994년에 폐교되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 유곡리 외부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것에도 불편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외에도 의료시설이나 문화공간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²¹⁾

1985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유출된 결과, 현재 주민들의 대부분은 입주1세대 노인들이다. 젊은 세



그림 10. 1970년대 유곡초등학교

Fig. 10. Yugok Elementary School in the 1970s
Source: Gimhwa-Up, 2009.

대일수목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표 3에서 보듯이 현재 마을 주민들은 50세 이상의 주민이 84명(71.2%)에 달한다. 주민등록상 50세 미만 연령이 34명(28.8%)이지만 상당수가 거주지로 등록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들의 연령대는 더욱 더 높다.

총 60호 주택 중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14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의 쇠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곡초등학교의 폐교된 모습이다. 1970년대만 해도 그곳은 경로잔치와 학예회, 운동회 등을 통한 단합과 번영의 상징이었다(그림 10, 11 참조).

IV. DMZ 국가촌락 사업의 교훈과 함의

철원 유곡리 통일촌은 파주 백연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DMZ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촌락 사업이다. 다른 나라의 국가촌락 사업에서처럼 통일촌 역시 초기에는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통일촌의 쇠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데 첫



그림 11. 폐교된 유곡초등학교 전경

Fig. 11. Former Yugok Elementary School
Source: taken in July, 2015.

째는 공공계획학의 측면에서 국가촌락화 사업을 성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단 및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DMZ 국가촌락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1. 공공계획학적 차원

통일촌의 경험은 첫째,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물리적 기반시설이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물론 아직 통일촌에 농촌공동체적 측면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²²⁾.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생활수준에 있어서 가구별 격차가 발생하면서 입주 초기 특유의 단결력이나 협동심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외부적 자극과 지원에서 시작된 통일촌은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체 동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DMZ 지역에 입지하여 섬처럼 격리되어 존재하는 촌락 형태로부터 국가주도 마을만들기의 태생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DMZ 바깥세상과의 오랜 단절과 내부통제는 내부공동체 유지에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²³⁾ 공간적 고립은 외부세계에 대한 전망을 부추길 수도 있고, 내부갈등을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

셋째, 국가촌락화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궁극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촌이 현재와 같은 쇠퇴에 직면하게 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1980년대에 시작된 토지소유권 분쟁이었다. 초기에 정부는 통일촌을 ‘기회의 땅’으로 제공했지만, 1983년 토지소유권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스스로가 통일촌 존립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이 DMZ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질 북한지역 내 토지소유권 분쟁의 징후이자 전조라는 사실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서도 토지소유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²⁴⁾

2. 분단관리 및 통일정책 차원

통일촌은 애초에 경쟁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대북 선전과 방위체제의 임무가 중요했으나, 현재는 남북한의 관계 및 접경지역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예전과는 다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촌이 처한 위기국면을 고려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선택지로 가능해 보인다.

첫째, 분단관리 차원에서 국가촌락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마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물리적 시설의 전반적인 쇠퇴에 대응하여 노년층을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나 공터를 재생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는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 같아 보이지만,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처방이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도 생활시설의 개선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입주주민 스스로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일촌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DMZ 국가촌락을 안보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곡리 통일촌은 최근 새로운 관광사업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폐교된 유곡초등학교 부지에 서울시가 건설하여 2016년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자연캠핑장’도 그러한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이미 그 선례는 경기도 파주 관문점 지역의 ‘통일맞이 대성동 첫마을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⁵⁾ 관광단지가 되어 DMZ 지역에 민간인이 많아지게 되면 이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해외 관광객의 대거 유치를 통해 아랍권의 무장공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김학준, 1999:30).

셋째, 차제에 국가촌락사업을 DMZ 전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급적 그곳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정주하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한국전쟁 이전에 인구가 밀집하여 살았던 곳으로 통일과정에서 재정주화를 통한 원상복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는 신도시건설 차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DMZ 접경지역 국가촌락 혹은 신도시들은 유사시 탈북인구를 흡수·관리하는 공간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북 선전촌이라는 통일촌 본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V. 결론

국가촌락 사업의 세계적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도 근대주의를 토대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촌락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 자발성과 내부동력의 결여, 공동체의 균열, 토착화에의 실패, 외부와의 격리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이와 같은 국가촌락의 보편적 한계와 실패



는 우리나라 DMZ 국가총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유곡리 통일촌의 경우에는 DMZ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토지소유권 분쟁이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총력으로서 통일촌의 존속 위기는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차제에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촌의 토지분쟁 사례는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개편 방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유곡리에서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기존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작금의 통일촌 사례를 통일촌 자체의 지속가능성 차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주1) DMZ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 2km에 이르는 군사 완충지대이다. 민간인통제선은 DMZ 남쪽 5-10km에 걸쳐있으며 군사작전과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이다. 민간인통제구역은 민간인통제선과 DMZ 사이의 지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포괄해 'DMZ 지역'으로 통칭한다.
- 주2) 물론 지금까지 DMZ 지역 내 민간인 마을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론적 논의를 생략한 채 현재의 상황 혹은 역사적인 현상을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재한, 2011; 박영철·김영봉, 1997; 경기문화재단, 2013 등 참조).
- 주3) 조사는 주민들의 가족 및 거주, (경제)활동 및 통행, 일상생활, 마을공동체, 안보 및 통일 등의 항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마을의 이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전(前) 철원군의회 의원, 입주 2세대 주민 등 주요인사들을 모두 조사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70세 이상(32명, 65.3%), 거주 기간은 40년 이상(41명, 83.7%), 동거가족은 부부(35명, 71.4%), 성별은 여성(30명, 61.2%), 직업은 농민(42명, 85.7%)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인구구성에서 1973년 입주 1세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례가 14.2%(7명)에 불과해 원활한 주민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구 분	인적사항
연령대	50대 1명(2%), 60대 15명(30.6%), 70세 이상 32명(65.3%), 결측 1명(2%)
성별	남성 19명(38.8%), 여성 30명(61.2%)
직업	농업 42명(85.7%), 전업주부 4명(8.2%), 기타 3명(6.1%)
동거가족 ¹	'부부' 35명(71.4%), '자녀' 7명(14.2%), '손주' 2명(4.0%), '없음' 7명(14.3%)
유곡리 거주기간	'0~10년' 2명(4.1%), '11~20년' 0명, '21~30년' 3명(6.1%), '31~40년' 3명(6.1%), '40년 이상' 41명(83.7%)

주: 1. 중복응답 문항

- 주4) 베트남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항쟁 당시 전락촌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김은희, 2006 참조).
- 주5) 현지 설문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책 때문에 유곡리 입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49명 중 35명(71.4%)이 유곡리 거주를 정부의 경작권 보장과 주택 제공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주6) 세대주가 장손일 경우 입주를 불허한 이유는 당시 장손이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적 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 N은 입주 당시의 엄격한 선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안 되었고, 자녀들 셋에 부부 둘로 다섯 식구가 넘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때 오는 경우도 있고, 농사를 못 지어도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못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 주7) "대북 선전용 마을이라 집들이 똑같이 지어져서 멀리서 봐도 깨끗했다. 또한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비닐)하우스도 없었고 가장 위쪽에 학교가 위치하는 등 선전 마을의 면모가 뚜렷했다"(주민 O의 증언)
- 주8) "입주 당시 인근 마을인 와수리에는 초가집이 많았어요. 초가집이 80%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곡리는 벽체도 두껍게 만들고 지붕도 슬레이트로 했단 말이지요. 그때는 다른 데는 슬레이트가 없었지...<중략>... 그리고 대지가 200평에 건물 두 채로 만들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구요. 그때는 여기가 아주 별장 같았던 말이에요."(주민 J의 증언)
- 주9) 주민 J는 군사훈련 상황과 긴장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서울 사람들이 여기서 (잠을) 자지 못했죠. 대남방송하니까 무서워서...<중략>... '비상!'하면 칼빈총을 들고 진지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1호부터 4호까지 제1 방공호, 5호부터 몇 호까지는 제2방공호. 그런 식으로 탄약고에서 탄약을 배치 받아 올라가는 거죠"
- 주10) 2002년 유곡리 입구에 세워진 통일촌 기념비 비문은 다음과 같다: "...<전략>... 6.25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던 땅을 1972년 지뢰 하나하나를 찾아 제거하고 삽과 호미로 농경지를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다가 1973년 민통선 북방 통일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 촌 건립계획에 따라 60세대의 주민들이 입주 정착하였음. 가구당 농경지 6,300여평을 경작하면서 유곡리의 기반이 형성되기까지 입주민들의 피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정신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에 글을 새겨두는 바입니다.”
- 주11) 수확량에 관한 정보는 김영규(2013:364) 참조. 주민 P의 증언을 통해 당시 유곡리의 영농성과와 낙관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초기에는 논이고 밭이고 다 다니면서 콩을 심었어요. 그 때는 농지가 정리가 안 됐으니가 공동으로. 10집이 1개조로 해서 총 6개조를 짚고, 조별로 모를 심고 가을에 추수 하고. 그러니까 그때 38가마가 나오더라구요. 하하하. 2,400평을 심었는데”
- 주12) “그래도 장교출신과 그 부인들은 어느 정도 학력을 갖췄는데, 우리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도 드물지. 와서 보니까 여성 가운데 고졸출신은 나밖에 없고, 잘해야 중졸 아니면 초등학교 출신이라 한글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 <중략>... 예를 들어 나는 좋은 뜻으로 “이게 방부제고 이게 방습제입니다” 얘기를 하면 “배운 척 한다, 아는 척한다” 이렇게 말 하나까” (주민 B의 증언)
- 주13) “(입주 초기에는) 타지출신 주민이 많았죠. 두레라는 거 있죠? 다섯 가구씩 해서 서로 일을 도와주었어요. 두레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어면서 했죠. 여기가 두레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서로 더 잘 되려고 경쟁을 많이 했어요. 도와주면서도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죠.”(주민 O의 증언)
- 주14) 강원도 양구군 접경지역의 토지분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 소유권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첫째, 군 작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둘째 한국동란에 의한 점유권 이탈은 농지개혁법 상 불경농지(不耕農地)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며, 셋째 민통선 지역의 유휴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인영·김재한, 1999:407-408).
- 주15) P주민은 입주 당시 내무부장관이 “당신네들은 여기서 살다가 논두렁 밭두렁 비고 죽으시오”라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그건 내 땅이잖아. 내 땅이야”라고 항변했다.
- 주16) 토지분쟁 당시 유곡리의 분위기는 살벌했고 토지분쟁 때문에 피해를 본 어떤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칼을 들고 덤벼들” (주민 E의 증언) 일이 생길 정도였다. 주민들이 직접 밭 벗고 나서서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의 행동도 시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주17) “그때(입주 초기) 당시는 품앗이를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의리가 엄청 좋았다고, ...<중략>... 그런데 뒤늦게 땅 임자들이 와 가지고 땅을 뺏고,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가진 땅이) 5천 평, 어떤 사람은 7천 평 이렇게 되니까 빈곤 차이가 나서 마을 분위기가 살벌해 지는 거지”(주민 J의 증언)
- 주18) 마을에 대한 소속감이 얼마나 강한지 묻는 설문조사에 주민들은 “매우 강하다”(12명, 24.5%), “약간 강하다”(4명, 8.2%), “보통이다”(13명, 26.5%), “별로 강하지 않다”(16명, 32.7%), “전혀 강하지 않다”(4명, 8.2%)로 응답했다.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보통이다”, “매우 강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다. 주민들의 소속감은 초기에 비해 약화되어 현재는 ‘보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주19) 설문조사 결과 19명(38.8%)이 주민들은 마을의 가장 큰 단점으로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재를 꼽았다.
- 주20) 현지답사 중 젊은이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설문 대상자 중에서도 40대 이하 주민이 전혀 없고 면접 대상자 중 대부분 주민들(총 15명 중 13명)의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 주21) 현재 주1회 이동 보건소가 방문해 간단한 진료 및 치료를 진행 중이지만,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주민들이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용 시설인 놀이터는 현재 황량하게 방치된 상태이다.
- 주22)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공동체의 단합력은 일부 견재하고 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설문조사 결과 ‘매우 강하다’(44.9%), ‘강하다’(10.2%), ‘보통이다’(24.5%), ‘별로 강하지 않다’(22.4%), ‘전혀 강하지 않다’(6.1%)로 신뢰가 높다는 응답이 55.1%를 차지한다. 마을 주민들은 출타시 문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모든 피면접자가 대부분의 경우 문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는 주민들 간의 친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입이 제한되고 보안이 철저한 통일촌의 기본 특징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주민 G, H, I의 증언).
- 주23) 과거에 비해 검문 및 출입절차가 간소화된 것지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의 배분과 동선의 이용은 여전히 크게 제약되고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주민들(36.7%)이 마을 밖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검문에 따른 불편함(16.3%),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12.2%), 개인교통 수단의 부재(10.2%) 등이다. 주민들은 인근 ‘읍내’(김화읍 와수리)를 자주 방문하는데 반드시 먼 거리로 우회해 검문소를 거쳐 가야만 한다. 또한 긴급사태 발생 시 구급차 혹은 소방차가 신속히 마을로 들어오지 못한 사례도 있어 통행 문제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주민 A, E, M, N의 증언).
- 주24) 과거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택한 토지 소유 및 이용의 개편방안과 이것이 농민들의 자립기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상철·이영성, 1998 참고
- 주25) ‘통일맞이 대성동 첫마을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dmoz.go.kr>); 황은순, 2015.7.22. “DMZ 내 대성동 마을 30년 만에 리모델링”, 조선뉴스프레스 기사 참조



인용문헌 References

- 경기문화재단, 2013. 「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수원.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3. *Tongil-chon People: The Story of Their Life*, Suwon.
- 김영규, 2013. 「철원군 지방행정 60년사」, 철원: 철원군청.
Kim, Y. K., 2013. *The 60 Years' History of Cheorwon-Gun Local Administration*, Cheorwon: Cheorwon County Office.
- 김은희, 2006.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역사민속학」, 23: 181-210.
Kim, E. H., 2006. “The formation of the Strategic village during Jeju 4·3 and the life of the villager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23: 181-210.
- 김창환·이태희, 2013.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3(1):121-140.
Kim and Lee, 2013.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illages in Civilian Control Zone by using GIS”, *Journal of Photo Geography*, 23(1):121-140.
- 김학준, 1999. “DMZ 평화학의 정치적 구상”, 김인영·김재한 편. 「DMZ-발전적 이용과 해제」, 서울: 도서출판 소화.
Kim, H. J., 1999. “The Political Conception of DMZ peace studies”, edited by Kim, I. Y and Kim. J. H., *Developmental Use and Read of DMZ*, Seoul: Sohwa Publishing Co.
- 김화읍, 2009. 유곡리 마을연보 (바인더 자료). Gimhwa-Up, 2009. *The Annual Report of Yugok-Ri* (Binder Material).
- 녹색연합, 2008. 「DMZ 155마일을 걷다」, 서울: 도서출판 작은것이아름답다.
Green Korea Organization, 2008. *Walking along the DMZ 155 miles*, Seoul: JAGA.
- 박영철·김영봉, 1997. “한국의 접경지역 관리방안(하)”, 「국토」, 183: 61-73.
Park, Y. C and Kim, Y. B., 1997. “Korea's Management Policy on Boarder Region(Vol. 3)”, *Planning and policy*, 183: 61-73.
- 스카치폴, 테다., 1991. 「역사 사회학의 방법과 전망」, 박영신 역, 서울: 민영사.
Skocpol, Theda., 1991.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Translated by Park, Y. S., Seoul: Ilsinsa.
- 스콧, 제임스., C.,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Scott, James. C., 2010. *Seeing Like a State*, Translated by Jun, S. I., Seoul: Eco-Livres.
- 전상인, 1997. “지방화 시대의 분단과 통일: 강원도의 시각”, 「통일연구논총」, 6(2):137-159.
Jun, S. I., 1997. “Localization and Unification: Kangwon-do's Perspectiv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6(2): 137-159.
- 진종인, 2006.10.17. “민북마을 사람들④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강원도민일보.
Jin, J. I., 2006, November 17. “‘Minbook’ Viallage's People④: Yugok-Ri, Geunbook-Myun Cheorwon-Gun”, *Gangwondominilbo*.
- 철원군, 1976-2015. 「철원군 통계연보」. 철원군.
Cheorwon County Office, 1976-2015. *Statistical Year Book*, Cheorwon.
- 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 1992. 「철원군지(上)」, 철원군.
Committee for Republishing the Chronicle of Cheorwon-Gun, 1992. *The Chronicle of Chearwon-Gun vol.1*, Cheorwon.
- 최상철·이영성, 1998.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14(2): 1-33.
Choe, S. C. and Lee, Y. S., 1998. “A Study on Land Ownership and Use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Journal of KRSA*, 14(2): 1-33.
- Yann Arthus-Bertrand's Web site, Accessed November 2, 2015.

DMZ 국가촌락 사업(State Village Campaign) 연구

<http://yannarthusbertrand2.org>

Date Received	2017-02-08
Reviewed(1 st)	2017-03-10
Date Revised	2017-06-13
Reviewed(2 nd)	2017-06-24
Date Accepted	2017-06-24
Final Received	2017-07-05



7. 조별 명단



2023 한반도국립대네트워크 여름캠프 조별 명단

조	성명	소속학교	학과
1	최지옥	한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1	고은진	강원대	에너지자원공학과
1	윤종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1	김원석	강원대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1	이아령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1	김다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2	이종훈	강원대	건축학과
2	임세창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2	김하연	강원대	지리교육과
2	정은택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2	전민근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2	추서윤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3	김민경	강원대	문화인류학
3	김희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3	정현준	강원대	기계이용메카트로닉스공학부
3	김한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3	백경렬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3	고연위	전북대	기계설계공학부
4	박은비	강원대	동물자원학과
4	최유빈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4	김채은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4	변지민	서울대	인문계열
4	하준희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5	우광주	강원대	건축학과
5	고성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5	안수민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5	정의민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5	박예랑	강원대	디자인학과
6	이영재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6	전유빈	강원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6	김태민	강원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6	노현민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6	이태준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박사과정



8. 비상연락망



비상 연락망

서울대학교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	010-5883-0421
강원대학교 송영훈 통일강원연구원 원장님	010-9912-9877
전북대학교 권재범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010-7299-790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민지 연구원	010-2056-161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인석 연구원	010-8352-525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미숙 실장님	010-2541-9295

